



중동 혁명
역습의 기회를 노리는
제국주의

▶ 8~9면

진보대통합 논쟁
우경화 탓에
난관이 조성되다

▶ 3, 4면

쿠바는 어디로
중국 모델을 좇는
공산당

▶ 12면

자본주의와 복지 ③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

▶ 6면

발행인_ 김민석 편집인_ 김재현
인쇄인_ (주)아이피디 이승철
등록번호_ 서울다08179 (격주2)
등록연월일_ 2009년 1월 12일
주소_ 서울시 중구 회현동2가 57-1 2층
전화_ 02-777-2792 팩스_ 02-777-0211
제보_ 02-777-2791 E-Mail_ left21@left21.com

ISSN 2005-8217
9 772005 821003 71

Left21.com

제57호 | 2011년 5월 21일 ~ 6월 3일 | 값 1,800원

리포트21

위기와 분열의 이명박

내년 선거 때 두고 보자?

당장 투쟁을 건설해야

“이명박 정부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다. 산지사방에 어려운 국정과 제들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한나라당마저 새 지도부와 소장파가 반기를 들고 있다.”

〈조선일보〉 고문 김대중은 이명박이 처한 위기를 이렇게 지적했다.

정유사와 통신사 들은 이익을 수조 원이나 올리는데 보통 사람들은 고물가에 찌드는 현실, 청년층의 과반수가 월소득이 1백50만 원 이하인 현실, 전월세난 속에 내 집 마련 꿈은 갈수록 멀어지는 현실, 대학생의 90퍼센트가 로또를 산 적이 있는 절망적인 현실이 이명박에 대한 증오로 나타나고 있다. 동남권 신공항과 과학벨트 발표 이후에 각 지역에서 표출되는 분노의 밀바닥에도 바로 이것이 깔려 있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단순히 먹고 살기 힘들다는 불만을 넘어 시장경제에 대한 믿음까지 흔들리고 있다”고 걱정했다.

원수지간

이 때문에 한나라당 남경필은 “잘한 게 하나도 없다”며 이명박을 비판했고 ‘보은병’ 안상수마저 “분노를 느낀다”며 이명박을 씹었다. 전임 정부들도 레임덕을 겪긴 했지만 임기가 1년 9개월이나 남았는데 여당 권력이 비주류로 넘어간 적은 없었다. 이재오가 “배신은 한 번으로 족하다”며 이상득을 비판할 정도로 분열도 심각하다. 이재오와 박근혜는 진작부터 원수지간이었다.

문제는 대안도 안 보인다는 것이다. 얼마 전 유출된 ‘정의화 문건’에서는 “과감하게 5대5로 합당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보수대연합’을 제안하지만 이회창과 합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박근혜와 ‘빅딜’을 하라는 말도 나오지만, 박근혜도 머리가 복잡할 것이다. ‘수도권 젊은층’에서 민심 이반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박근혜가 가장 취약한 게 바로 그 쪽이다.

▶ 3면으로 이어짐



누구의말알아요?

“1970년대 동북아시아에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국민들을 고문하는 나라가 있었다. 사람들은 북한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아니다. 그건 남한이다.”

전 주한미대사
도널드 그레그

“할아버지는 천하장사처럼 힘이 세서 큰 나라를 지킬 수 있어요.”

어린이날 어린이에게 거짓말하는 이명박

“10미터짜리 쓰나미가 오고 9.5도의 강진이 오더라도 안전한 원자력 발전소를 짓기 위해 연구하고 투자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핵 집착증 환자 이명박

“정부가 고집만 부리면서 당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분노를 느낀다.”

물러나면서 이명박을 욕하는 한나라당 안상수

“그 나물에 그 밥이지.”
한나라당 비대위 구성을 두고 전 원내대표 김무성

“아파트 분양 원가 공개는 사회주의 정책”
민주당 새 원내대표 김진표가 2003년 부총리 때 했던 말

“노동3권 행사를 사용자가 모두 보장할 필요가 없다.”
신임 노동부 장관 이채필의 소신

“만약 이라크 특수부대가 조지 부시를 암살하고 시체를 대서양에 버렸다면 어떻게 생각해 보라.”

노엄 촘스키.
그런데 그러면 기뻐할 사람 많을 듯

“민주당은 도망친 것이 아니라 몸싸움보다는 침묵이 가장 강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대변인 차영.
한EU FTA 통과를 막지 않은 이유

서울 거리에서
레프트21을 만나 보십시오
매주 월·금 저녁 7~8시

강남역 8번 출구 ABC뉴욕제과 앞
신촌역 3번 출구 맥도날드 앞
홍대입구역 8번 출구
혜화역 4번 출구
종각역 4번 출구 피아노거리 입구
건대입구역 5번 출구 건넌터 롯데백화점 앞

서점에서도
레프트21을 살 수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서울대앞), 인서점(건국대 앞), 풀무질(성균관대앞), 이음책방(대 학교), 숨어있는 책(신촌), 이상한 나라의 헌책방(역촌), 동방서림(울산 현대차 공장 앞)

《레프트21》온라인

《레프트21》트위터를 팔로우해 주세요. @left21twit

《레프트21》페이스북의 팬이 돼 주세요. bit.ly/left21fan

새로운 온라인 기사들이 수시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www.left21.com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탄압

이명박 정부는 위기 탈출용 마녀사냥 중단하라

5월 13일, 경기도 경찰청과 충남보안수사대는 노동운동 단체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이하 전국회의) 전직 간부 여섯 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전국회의의 “강령·규약·사업계획이 북한의 신년사와 조선노동당 규약과 똑같거나 유사성이 높아서 이적단체로 볼 수 있다”며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를 들이댔다. 또, “쌍용차 정리하고 반대 투쟁과 고(故) 박종태 열사 투쟁, 2008년 촛불항쟁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북한과의 연계나 북한에 친화적인 견해를 빌미로 탄압하는 것은 지난 60여 년 동안 지배계급이 반복해 사용해 온 낡은 레퍼토리다.

이명박 정부에게 지금 국가보안법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북한의 위협' 때문이 아니라 북한을 핑계로 내부의 적 — 즉 노동자 운동과 민중운동 그리고 노동자 정치조직 — 을 통제하고 억압하기 위



정부는 '북한과의 연계'를 핑계대지만, 진정한 의도는 노동운동 탄압이다.

해서다.

경찰이 전국회의가 '배후조종'했다고 밝힌 투쟁들은 모두 이윤을 위해서라면 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명박 정부와 자본에 맞선 투쟁들이었다.

쌍용차 노동자들을 살인 진압

하고, 지금도 노동자 열다섯 명을 연쇄 자살로 내몬 것은 이명박 정부였다. 경제 위기 고통을 떠넘기고 노동자들의 삶을 짓밟은 정부와 경찰과 자본가들이었다.

최근 이명박 정부가 '자본주의

연구회'와 '6·15청학연대'에 이어 노동운동 단체인 전국회의로까지 국가보안법 탄압을 확대한 사실이 아니라고 무시했다.

4·27 재보궐 선거 패배 이후

리비아

한 달에 1천8백 번씩 폭격하는 서방

최근 영국 육군참모총장은 리비아의 사회기반시설로 폭격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애초에 나토는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자 리비아에 개입한다고 주장했다.

서방 폭격기들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가장 치열했을 때보다 횡수로 두 배나 더 많은 폭격을 감행하고 있다.

따라서 민간인 사상자 수는 나토가 주장한 것보다 훨씬 많을 수 있는 것이다.

서방 전투기들은 지금까지 리비아를 상대로 2천4백 회의 '공습출격' — 폭탄을 투하하는 비행 — 을 했다. 이것은 매달 1천8백 회 이상의 폭격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서방군이 공중 폭격 횡수를 급격히 늘렸을 때 출격 횡수는 매달 평균 9백 회였다.



서방 군대의 폭격이 미수리타의 가정집을 박살냈다.

높은 고도에서 투하한 폭탄은 레이저로 정밀 유도를 받지만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봤듯이 민간인 희생자를 낳을 수밖에 없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폭격 희생자들이 속출하자 반점령 정서

가 높아졌다. 예컨대, 위키리크스가 폭로한 군사 자료를 보면, 2007년 8월 미군 폭격기는 2천 파운드 폭탄 여섯 발을 헬란드의 한 주택단지에 투하했다. 이 때문에 민간인 3백여 명이 죽었다.

서방의 리비아 폭격이 시작된 뒤

부터 나토와 주류 언론은 카다피 통치 지역에서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일축했고 카다피 정부 언론의 민간인 사망자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무시했다.

친카다피 언론이 5월 초 서방의 트리폴리 공습으로 카다피의 아들 한 명과 손자 세 명이 죽었다고 보도하자 미 국방부 관리들은 카다피가 심리전을 벌인다고 비난했다. 그들은 서방 폭격으로 민간인이 죽었다는 증거는 없다고 주장했다.

민간인 희생

2주 전에 연합군 정부들이 카다피를 더 매섭게 공격해야 한다고 촉구한 뒤부터 나토는 폭격을 강화했다. 그들은 교착상태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치고 있다.

사적인 자리에서 나토 지도자들은 폭격이 민간인 희생자를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이 더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게다가 불만이 극에 이른 노동자들이 올해 임금 인상과 노동조건 개선, 노동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투쟁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처럼 사방에서 엄습해 오는 위기에 대한 불안과 언제 다시 터져 나올지 모르는 대중 투쟁에 대한 두려움이 지금의 공안 탄압의 배경이다.

전국회의가 밝혔듯이, 지금의 탄압은 “명백히 노동운동 탄압”이자 “정부의 불순한 의도에 의한 탄압”이다.

노동자들의 경제 투쟁과 시민적·정치적 권리를 옹호하는 운동은 서로 밀접히 연관돼 있고, 하나에서 밀리면 다른 하나에서도 밀리기 쉬워진다.

전체 노동운동 진영은 정파의 차이를 떠나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탄압에서 전국회의를 분명히 방어해야 한다.

박성환

들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면 폭격에 대한 대중적 지지가 약해질까 봐 걱정한다.

일각에서는 미사일과 고화질 비디오 카메라를 장착한 미국 무인 폭격기가 정밀 폭격을 가능케 해 줄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파키스탄에서 무인 폭격기의 공격으로 민간인 희생자가 계속 발생한 것을 보면, 이런 주장이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나토 사령관들은 엄청난 화력을 보유하고 저공비행을 할 수 있는 미국 아파치 헬리콥터, A10 비행기, AC130 무장비행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장비들은 더 많은 민간인 희생자를 낳을 것이다.

‘인도주의 개입’의 20년 역사를 보면 현대전은 필연적으로 민간인 희생자를 낳는다. 서방 정부와 주류 언론은 나토 폭격이 리비아인들에게 끼친 피해에 관해 제대로 말하지 않고 있다.



5월 28일(토) 오후 1시 30분
전교조 창립 22주년 기념
수도권 교육주체 한마당
서울역 광장
주최: 전교조 서울·경기·인천지부

6월 11일(토) 오후 4시
이명박 정권 심판 1차
범국민대회 (전국 동시다발)
서울 시청광장

6월 29일(수)
2차 범국민대회 및
전국노동자대회 (서울 집중)
서울 시청광장

정선영

진보대통합

분열과 후퇴의 길인가, 단결과 투쟁의 길인가

5월 말까지 최종 합의를 도출하기로 한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서 진보의 단결이 아니라 분열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것은 연석회의를 주도하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민주당과 계급연합(민주대연합)을 위한 부족물로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면서 벌어진 결과다.

그러다 보니 우경화된 방향의 진보대통합이 추진되면서 오히려 진보의 분열을 촉발하고 있는 것이다.

개혁주의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은 아예 민주당과 함께 하나의 당을 만들자는 야권단일정당론자들이다. 이들은 최근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를 출범시켰다. 이 단체의 이상이 상임대표는 “‘집권’ 없이 복지국가 만들기는 불가능하다. … 민주당을 배제하는 전략은 이런 점에서 현실성이 없다”고 말한다.

‘복지국가’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진보의 정체성을 포기한 채 ‘민주당으로 흡수되자고 주장하는 셈이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지국가가 가능이나 할까?

민주당이 여전히 폐기하지 않는 FTA 정책은 ‘포퓰리즘 복지’와 정면으로 충돌한다. 따라서 ‘진보의 합창’이 지적했듯이 “한-EU FTA 처리과정에서 다시 확인된 민주당의 보수성과 기회주의”를 볼 때 “원칙과 가치가 불분명한 야권대통합정당론은 옳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다.”

제 눈에 물 대기

그런데 야권단일정당론이 계속 힘을 얻는 것은 진보진영의 대다수가 민주당 연합, 즉 민주당과 야권연대는 불가피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진보의 합창’도 “야



“민주당은 집에 가 버렸다” 이명박의 고통전가 정책을 막으려던 야권연대에 매달리지 말고 진보진영이 단결해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권연대는 불가피하며 중요합니다” 하고 말했다. 그런데 민주당과 손을 잡고 이명박을 심판하자는 논리는 아예 당을 합쳐서 연대의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논리가 발전하는 것을 막기 어렵다.

최근 김창현 민주노동당 울산시당 위원장은 반갑게도 “[진보정당의] 독자성과 차별성, 정체성이 공중분해될 수 있”다며 연립정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밝혔는데, 민주대연합 노선 자체가 그런 위험이 있다는 것을 봐야 한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한 EU FTA로 뒤통수를 맞은 직후에도 “한나라당 심판만이 방법”이라며 민주당 비판을 삼갔다. <민중의 소리>는 이 사건을 두고 어쨌든 민주당이 FTA 비준안 통과를 반대하는 시늉을 했다는 이유로 “야

권연대가 진보진영[의] … 주장을 현실의 정책으로 만들어 나가는 좋은 수단”인 점이 증명됐으며 제 눈에 물 대기식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권영길의 비판처럼 “민주당은 명석 깔아준 채 날치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집에 가버렸다. … 강행 처리는 한나라당이 했지만 그 빌미는 민주당이 준 것”이다.

야권연대 때문에 계속 민주당에 매달리고 투쟁 건설을 뒷전으로 한다면 한미 FTA 비준안 통과 때도 뒤통수를 맞기 쉽다. 이처럼 지금 야권연대의 볼모가 된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진보정당이다.

20세기 초 자유당과 연합한 영국 노동당은 자유당 정부를 지지하고 노동자 투쟁을 억제하는 구실을 했다. 그 결과,

1차 세계대전 직전에 오히려 의석수가 줄었다.

그런데도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의 사전 단계로 생각하는 다수와 지도자들은 급진좌파는 배제하고 소수파는 무시하며, 패권적으로 우경화된 진보대통합을 밀어붙이고 있다. 연석회의의 3차 합의문에서는 원안에 있던 “공급적으로 자본주의를 극복”이란 문구도 삭제됐다. 민주당 등과 손 잡으려고 급진적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진보대통합을 적극 지지하며 연석회의에 참가 신청을 한 다함께는 ‘반자본주의 단체’라는 이유 때문인지 계속 참가를 봉쇄당하고 있다.

최종 합의 도출을 앞두고는 일부에서 진보신당 독자파나 사회당까지 배제하고 가자는 움직임까지 있다고 한다. 연립

정부 노선을 비판하고 패권주의 반성과 북한 3대 세습 반대 등을 요구하는 세력은 그냥 ‘버리고 가자’는 식인 듯 하다.

‘도로 민노당’도 못 되는

이러니 ‘도로 민노당’보다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원래 자주파와 평등파가 함께 만든 민주노동당의 강령에는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다는 것과 “북한 사회주의의 경직성 극복” 등이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극복”도 빼버리고 북한 정권의 독재에 대한 비판도 회피하고, 민주당과 손잡으며 진보정치의 독자성도 포기하는 게 후퇴가 아니면 무엇인가. 유럽에서 신자유주의를 수용한 우파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뒤를 따라가려는 것인지 걱정스럽다.

연석회의 주도 세력은 더 늦지 않게 후퇴를 멈춰야 한다. 소수파들의 요구를 수용해서 분열을 막아야 하고, 급진좌파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

다함께와 <레프트21>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보대통합은 이명박에 맞서며 민주당과는 구분되는 급진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건설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의 반동적 정책과 공격에 맞선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을 고무하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수단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정치와 전통, 문화가 다른 단체들이 광범하게 단결하려면 각자 정치적·조직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당면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공동전선적 방식으로 단결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해 왔다.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갈 때 진보대통합은 진정으로 진보의 폭넓은 단결을 이루며 급진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김문성·전지운

▶ 1면에서 이어짐

따라서 지금 상황은 지난 3년 동안 고통받아 온 우리가 과감하게 나서서 빼앗긴 것을 되찾을 기회다. 4·27 재보선은 그 가능성을 보여 줬다. 민주노동당 김선동 의원은 당시에 “투표 마감을 한 시간 앞두고 투표장마다 퇴근한 노동자들이 줄을 이뤘다. 노동자들이 정치적으로 일어섰다는 느낌”이라고 했다.

투표장에서 분출된 이 분노를 투쟁으로 묶어 세력 등록금 인상을 막고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을 이뤄야 하는 것이다. 이명박의 반동 정책들을 막아내고 노동자·청년들의 삶을 위한 양보를 받아내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제는 충분히 수행되지 않고 있다.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은 각 대학에서 점거 농성 등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사그러들고 있다. 최저임금과 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도 불이 붙지 못하고 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한미 FTA 비준안은 통과돼 버렸다.

내년 선거에서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심



법정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인상을 쟁취한 청소년 노동자들. 진보진영은 이들에게 배워야 한다.

판해야 한다며 진보진영이 야권단일정당이니, 연립정부니, 선거 연합이니, 후보 단일화니 하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되고 있다.

진보진영의 지도자들이 이런 데 힘을

쏟고 있는 사이에 정작 당장의 투쟁 요구와 과제들은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 함께 선거에서 이명박을 심판해야 할 민주당이 부당스러워 하는 요구나 투쟁 방법들은 알게 모르게 뒤로 밀려나는 듯하다.

민주노동 지도부도 최저임금 인상과 임금 인상을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무하며 투쟁 건설에 주력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현장 노동자들 사이에서는 ‘투쟁은 뒷전이라는 의구심도 나타난다. 이러니까 제3노동 파위가 틈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래서는 이명박이 위기를 벗어나거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근근이 반동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

진보진영은 당장 노동자·청년들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한 투쟁 건설에 주력해야 한다. 민주당과 선거 연합이 아니라 노동자 단결과 투쟁을 위한 연합을 건설해야 한다. 그런 투쟁이 성공적으로 건설되고 성과를 남겨야 내년 선거에서도 진보의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다.

전지운



레프트21을
정기구독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기구독과 후원으로 지난 2년 동안 기업 광고 전혀 없이 발행할 수 있었습니다.
정기 구독료(우편료 포함) : 1년 (26개 호) 5만 원 | 2년 (52개 호) 10만 원

입금 계좌

예금주 (주)레프트미디어 : 하나은행 296-910007-15804 / 국민은행 020601-04-080896 / 우리은행 1005-301-422382 /

신한은행 140-008-401399 / 농협 301-0010-1643-71

● 신청 : 02-777-2792 /
웹사이트(www.left21.com)에서도
정기구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구독 기간 중에 구독료나 우편료가 올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레프트21에서 만난 진실을 널리 전하고 싶다면, 한 부를 더 구입해 주위에 소개해 주세요. 자본과 권력에 맞선 저항의 네트워크를 만드는 길입니다.

진정으로 “낡은 진보”는 누구인가

야권단일정당이나 야권연대를 추구하는 개혁주의자들은 특하면 “낡은 진보”를 들먹인다.

물론 진보가 시대적 상황에 걸맞게 새롭게 혁신하는 것은 좋은 일일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주로 진보적 원칙을 포기한 사람들이 자신의 후퇴를 정당화하고 진보정치에서 급진성을 제거하려고 할 때 ‘낡은 진보론’을 이용한다는 것이다.

‘계급’과 ‘대중투쟁’을 강조하는 것은 “낡은 진보”라고 이들은 말한다.

이들의 첫째 근거는 시대가 변했다는 것이다.

진중권은 “현재의 진보가 어떤 면에선 한나라당 뽐칠 정도로 수구적”이라며, “NL은 농경사회의 패러다임이고 PD는 산업사회의 패러다임이다. 사회는 이미 정보사회로 진입”했다고 말한다.

민족주의는 자본주의 국민국가의 산물인데, 민족해방론이 ‘농경사회 패러다임’이라는 황당한 주장은 일단 제쳐 두자.

과장과 달리 ‘정보사회’라 불리는 현상의 상당 부분을 떠받치는 것은 여전히 산업 노동자들이다. 스마트폰의 ‘기적’은 위험한 작업 환경에서 일하는 반도체공장 노동자들이, 끝없는 번으로 집에서 상품을 사고파는 ‘신세계’는 거대 물류 창고를 관리하고 온종일 교통지옥을 오가며 운송·배달하는 노동자들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계급은 낡지 않았다’

반도체를 만들다가 백혈병으로 죽어간 삼성전자 노동자들과 아이폰을 만들다 연쇄 자살한 중국 폭스콘 노동자들이 ‘정보사회’의 숨겨진 진실인 것이다.

겉모습이 아무리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사회의 본질은 ‘자본주의 계급사회’다.

이런데도 “프로게이머들이 하고 있는 것이 미래 사회 블루칼라의 모습”이라며 “노동운동은 끝났다”는 진중권의 말은 어처구니가 없다.

한편, “디지털 시대”에도 세계 곳곳에서 경기 침체와 물가 폭등, 실업과 빈곤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지난해 말 현대차 파업 당시 점거를 해산시키려는 사측과 노동자들의 충돌 이란 것을 보고도 ‘계급 갈등과 모순을 강조하는 것이 낡았다고 할 텐가.

위기에 처한 자본가·투기꾼 들을 살리려고 세금을 퍼부으면서 그 때문에 줄어든 정부 재정을 충당하려고 노동자들의 복지와 일자리를 삭감하고 있다. 그래서 계급 간 격차와 불평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김규항은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것은] … ‘계급적 격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는 말”이라며, ‘계급’은 결코 낡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둘째, 이제 더는 대중투쟁으로 사회 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낡은 진보론’을 비판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것은 노동자 양보론으로 연결된다.

예컨대, 최근 출범한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의 이장이 상임대표는 “‘낡은 진보’는 … 국민의 건강보험료 추가 부담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는다”고 비판한다. 보험료나 세금을 올리는 양보도 하지 않고 복지 확대를 바라는 것은 ‘공상’이며 ‘낡았다’는 것이다.

‘복지국가 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민주당 개혁파와 함께 만들] 복지국가 단일정당[이] …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면 포괄적 복지국가 건설은 우리의 현실이 됩니다” 하고 말한다.

대중행동보다 선거 득표와 정치엘리트들의 법안 협상을 통해 복지국가를 만들 수 있고, 이를 위해 민주당과도 손잡자는 것이다.

복지국가 단일정당을 지지하는 진보신당 박용진 부대표는 “10년 20년, 진보정치가 집권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잔인하고 무책임한 일”이라고 말한다.

이는 최근 심상정 전 의원이 ‘정치인은 신념윤리보다 책임윤리를 중시해야 한다’는 막스 베버의 주장을 인용하며 야권연대를 정당화하는 것과 유사하다.

신념에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신념과 책임을 분리해 진보의 원칙(신념)에서 벗

어나는 정치 행보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김규항의 말처럼 “한국에서 유의미한 정치적 변화는 언제나 의회가 아닌 길거리에서 이뤄졌다.” 즉 대중이 거리에서 직접 정치의 주역으로 변화를 이끌어 내 왔다.

의회가 아닌 길거리

1987년 민중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군 사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었다. 2008년 촛불항쟁이 있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가 공기업과 의료 민영화 같은 것들을 멋대로 추진할 수 없었다.

따라서 선거를 통해 ‘도로 민주당’ 정부만 만들면 복지 확대 등 엄청난 진보가 가능할 것처럼 과장하며 대중운동 건설을 방기하고 민주당과 계급연합에만 매달리는 것이야말로 ‘무책임’ 정치다.

역사를 돌아보면, “시대가 바뀌었다”며 정치적 후퇴를 정당화하는 개혁주의

자들은 많았다. 1백 년 전 독일의 사회민주주의자였던 베른슈타인도 그런 예다.

그는 ‘세상이 바뀌어서’ 마르크스가 말한 자본주의의 모순은 사라졌고 자본주의를 점진적으로 개혁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말한 10여 년 뒤 자본주의의 모순은 야만적인 세계 전쟁을 불러 왔다. 그를 지지했던 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전쟁에 찬성표를 던졌다.

오늘날에도 프랑스 사회당의 개혁주의자들은 사르코지만 몰아내면 된다며 신자유주의 전도사 IMF 총재 스트로스칸을 대선 주자로 내세우다가 곤경에 처했다. “낡은 이념”을 버리고 추구한 실용주의가 낡은 결과다. 반대로, 아랍 혁명은 계급, 혁명, 제국주의 등이 여전히 생생한 현실임을 보여 줬다.

낡은 것은 우경화된 개혁주의 전략이고, 계급투쟁이야말로 현실이다.

김문성

진보대통합과 좌파의 구실

‘진보정치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연석회)가 진보대통합을 우경화 방향으로 끌고 갈 뿐 아니라, 이에 반대할 것이 분명한 급진좌파를 계속 배제하고 있다.

‘반자본주의 단체는 안 된다’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고, 이 때문인지 다함께의 참가 신청은 계속 보류되고 있다. 연석회의는 공식적으로는 ‘다함께가 민주노동당 의견그룹’이라는 이유를 내세우지만, 이것은 핑계일 뿐이다. 다함께가 민주노동당과 조직적·정치적으로 완전히 독립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진보진영에서 다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데 연석회의 내에서 상대적 좌파로 여겨지는 김세균 교수와 ‘진보정치세력 연대를 위한 교수연구자 모임’(진보교연)은 그동안 이런 방향에 사실상 동조해 왔다. 진보교연은 민주당과의 연합을 우선하는 것에 비판적이면서도 동시에 ‘조건부 후 민주대연합’을 주장하며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의 전 단계로 여기는 태도에서 벗어나 있지 않았는데, 그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좌파는 연석회의의 우경화 시도를 막기 위해 원칙 있게 개입해야 한다.

지금은 진보대통합이 오른쪽으로 나아가는 것을 저지할 좌파들의 원칙 있는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김세균 교수는 유감스럽게도 그보다는 진보대통합 과정에서 범PD 경향의 무원칙한 연합을 통해 지분을 챙기는 데 더 관심이 있는 듯하다.

한편, 우경화된 진보대통합에 대한 진

보신당 ‘독자파’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장석준 상상연구소 연구기획실장은 “우리가 싸워야 할 대적은 통합론 배후의 ‘민주연립정부’ 노선”이라며 현재의 진보대통합 움직임과 선을 그었다. 진보신당 김은주 부대표를 포함한 ‘독자파’ 중 일부는 더 나아가 사회당 등과 합세해 5월 21일 ‘새로운 노동자정당 추진위원회’(새

노추)를 출범하려 한다.

현재 진보대통합의 주요 추진자들이 진보대통합을 민주당과 계급 연합하는 지렛대로 쓰려 한다는 이들의 비판은 옳다. 패권주의적 통합에 대한 반발과 북한 3대 세습 비판도 공감할 만하다.

그럼에도 진보의 단결을 바라는 대중적 염원을 고려해, 분열을 기정사실화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진보대통합이 되도록 개입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다. 그 점에서 민주당·참여당까지 통합대상으로 보는 ‘대통합파’보다 민주노동당과 통합하자는 ‘소통합파’가 더 문제라는 식의 장석준 씨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

게다가 진보신당 ‘독자파’가 과연 일관되게 좌파적 견지에서 계급연합을 반대하는 것인지 의심스럽게 만드는 주장도 있다. 가령, 김중철 진보신당 서울 동작당원협의회 위원장은 “자본주의 구조 변혁”이 중요하다면서도 노동자들의 세금을 더 걷는 “보편적 증세”를 과제로 내세웠다. 장석준 씨는 내년 대선 후보 문제를 논하며 “범 민주당 세력과의 후보 단일화 협상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고, 진보신당 이재영 정책위의장도

“연립정부가 무조건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고] … [진보정당] 규모도 더 커지고 내부 결속력이 강해졌을 때”는 연립정부를 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개입적 태도

급진좌파는 진보대통합 과정이 어차피 민주대연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그 과정을 방관해서 안 된다.

진보개혁 대중이 이명박과 한나라당을 저지할 대안을 염원하고 이를 위해 진보가 단결하길 바라는 상황에서, 좌파의 방관적 태도는 우경화하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에게 사태의 주도권을 넘겨 줄 뿐이다. 또, 노동자 대중에 대한 그들의 영향력 행사를 방지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급진좌파는 진보대통합이 민주대연합의 부속물이 되는 것을 원칙적이고 분명한 자세로 비판하면서 진보대통합의 우경화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해야 한다. 그 래야만 이명박에 맞선 진보적 대안을 염원하는 대중과 접촉하고 소통하면서 그들 속에서 급진적 대안을 주장할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최미진

맑시즘 2011

변 · 혁 · 이 · 냐 · 야 · 만 · 이 · 냐

7.21(목) - 24(일) | 장소 : 서울(추후 공지) | 주최: 다함께

맑시즘은 11년째 열리는 국내 최대 진보 포럼입니다

- 알짜배기 주제 60여 개
- 힘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연사들
- 민주적이고 열띤 청중 토론

아랍 혁명이 2011년 상반기를 장식했습니다. 이 혁명은 세계적 경제·정치 위기라는 맥락에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배자들은 혁명적 격변이 아랍만의 일이 아닐 수 있음을 걱정합니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는 자본주의 체제의 아만성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이윤 체제의 탐욕과 일본 지배자들의 핵무기 보유 욕구가 끔찍한 재앙을 낳았습니다.

맑시즘 2011에서는 '사회주의 아니면 아만주의'라는 갈림길에서 우리가 선택할 대안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토론하려 합니다.

더 나은 세계를 바라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연사

그밖에 많은 노동운동·사회운동 활동가들, 진보적 학자와 저술가들이 맑시즘 2011 연사로 옵니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중앙위원이자 런던대학교 킹스칼리지 교수. 국내에 번역된 책으로 《무너지는 환상》, 《미국의 세계 제패 전략》, 《반자본주의 선언》,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제3의 길은 없다》 등이 있다.

아랍 혁명의 현황과 전망
제국주의와 국제 정치경제
마르크스주의 - 오늘의 의미



김수행 성공회대학교 석좌교수.
국내에 《자본론》 완역 소개.
■ 마르크스 《자본론》 강의

미셸 카투이라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위원장
■ 경제 위기와 인종주의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 무상의료의 오해와 진실

이한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
■ 일본발 핵 재앙 -
핵발전은 불가피한가?



이호중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자본에 종속된 형벌권 -
현상과 논리

정성진 경성대학교 교수,
마르크스주의 경제학자,
■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본
한국 경제



천보선 전교조 교사,
진보교육연구소 연구원
■ 비교초기와 교육

최일봉 다함께 운영위원이자
국제연락간사
■ 마르크스주의와 정의



하종강 전 한울노동문제연구소 소장
■ 왜 노동운동이 중요한가?

다양한 주제의 포럼

다양한 주제로 60여 개의 포럼이 열립니다. 시리즈 강좌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사의 강연만 듣는 게 아닙니다. 충분한 청중식 토론 시간이 있습니다. 모든 참가자들에게 3~4분의 발언권을 보장합니다.

아랍 세계를 뒤흔드는 혁명

- 아랍 혁명의 현황과 전망 •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마르크스주의, 위기론, 대안

- 더 나은 자본주의인가, 반자본주의인가? • 금융화와 위기 • 장하준과 발전국가 논쟁

위기의 시대, 살아나는 노동자 저항

- 비정규직 투쟁과 노동자 연대, 무엇을 할 것인가? • 유럽의 긴축과 그에 맞선 투쟁
- 미국의 노동자 투쟁 - 과거와 현재 • 중국의 노동계급과 저항

빈곤

- 빈곤, 실업, 위생무어 • 구호, 봉사, 자선을 어떻게 볼 것인가?

북지국가 논쟁

- 북지국가 - 무엇을, 어떻게, 누가? • 유럽 북지국가들, 형성에서 위기까지

환경

- 일본발 핵 재앙 - 핵발전은 불가피한가? • 마르크스의 생태학

여성

- 성형, 빗기리, 섹시 강박 - 여성의 자신감인가 은폐된 성차별인가?
- 마르크스주의와 페미니즘 • 혁명 속의 여성들 - 파리코뎀에서 이집트 혁명까지

교육

- 진보교육감 시대 교육운동 1년 • 신자유주의와 대학 • 비교초기와 교육

마르크스주의로 세상 읽기

- 마르크스주의와 국가 • 마르크스주의와 정의 • 마르크스주의와 종교
- 마르크스주의와 노동조합 운동 • 마르크스주의와 아니키즘

마르크스의 방법

- 역사유물론 • 변증법 • 소외

사회주의, 궁금타

- 인간본성 때문에 사회주의는 불가능한가? • 시장 없는 사회주의는 가능한가? •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 사회민주주의와 사회주의 • 소련 붕괴 20년 -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인가? - 북한 국가자본주의 형성부터 위기까지 • 사회주의 전략 전술 - 공동전선을 중심으로

혁명가들과 그들의 사상

- 엥겔스의 생애와 사상 • 레닌과 당 • 트로츠키와 연속혁명 이론
- 로자 룩셈부르크의 생애와 사상 • 그람시의 생애와 사상

그 밖에도

- 중국 경제, 계속 잘 나갈까? • 진보대통합의 쟁점과 전망 • 베네수엘라 - 볼리바리안 혁명은 중단됐는가? • 다문화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 스페인 혁명 75주년 - 1936년 스페인 혁명의 교훈

... 등등의 포럼이 열립니다.

지금! 참가 신청하세요

참가비 : 하루 13,000원 / 나흘 40,000원

대학생 할인 : 하루 11,000원 / 나흘 30,000원 청소년·이주노동자·장기투쟁작업장 노동자 할인 : 하루 5,000원 / 나흘 15,000원

단체 할인 : 10명 모아 할인 받자!

학생회, 노동조합, 동아리 등 한 단체에서 10명 이상이 등록하면 나흘 티켓에 한해 15퍼센트 할인해 드립니다.

(대학생, 청소년, 이주노동자, 장기투쟁작업장 노동자는 해당 요금에서 추가 할인 적용)

www.marxism.or.kr

02-2271-2395

marxism2011@marxism.or.kr

스스로 익히는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 ②



국가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를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나아가 세상을 변혁하려는 독자들을 돕고자 마르크스주의 기초 개념들을 알기 쉽고 간단하게 설명하는 연재다.

최근 유시민의 책 《국가란 무엇인가》가 화제다. 이 책에서 유시민은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을 폄훼하며 국가를 이용해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는 중립적인 기구가 아니며 계급을 조율해 사회 전체의 이익을 대표하는 게 아니다.

국가는 “사회 계약”의 산물이 아니라 화해할 수 없는 계급 적대의 산물로, 군대와 경찰과 같은 무장력에 의존하는 계급 지배 기관이다.

외견상 국가는 중립적으로 보이기도 한다.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한편에서는 계급투쟁의 효과로, 다른 한편에서는 양질의 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국제 경쟁에서 다른 국가들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국가는 교육·보육·의료 등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경제가 위기에 빠지면 자본가들과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거나, 투쟁이 지배자들이 용인하는 수준을 넘어 발전하면 국가는 중립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포악한 계급적 본질을 드러낸다. 용산 학살이나 쌍용차 살인 진압을 보라.

자본주의 질서가 위협받는 상황이 되면 무장한 억압 기구들이 저항을 진압하고 체제를 수호하려고 전면에 나선다.

군대·경찰·사법부와 같은 국가기구의 고위 간부들은 지배계급의 일부다. 이들은 다른 자본가 계급의 구성원들과 수천·수만 갈래의 줄로 연결돼 있고, 그들 자신이 이 체제에서 특권적 지위를 누린다. 이들은 대중에 의해 선출되지도 통제되지도 않고, 엄격한 위계제로 관료 조직을 통제한다.

의회를 통해 국가를 통제할 수 있는가?

선거를 통해 불의를 저지르는 의회나 정부를 교체해 국가로 하여금 정의를 세우게 하자는 유시민 식의 주장은 언뜻 보면 일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는, 진정한 권력은 의회 밖에 있기 때문이다. 즉 선출되지 않은 자들인 자본가·군대·사법부·부르주아 언론 등이 국가 경제·정치·사회 전반에서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핵심적 결정을 내린다. 그래서 국가를 활용한 진보적 개혁 시도는 지배자들이 용인할 정도의 제한된 개혁이거나 강력한 대중 투쟁이 뒷받침돼야 일부 성과를 낼 수 있다.

만델라의 경제 자문으로 일하던 패트릭 본드는 남아공에서 ANC(아프리카민족회의)가 통치한 첫해인 1994년에 당시 조직 내에서 “이봐, 우리는 국가를 가졌는데, 권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지?”라는 농담이 유행했다고 회상했다.

무엇보다 바로 유시민 자신과 노무현 정부가 삼성 재벌이나 신자유주의에 굴복했던 경험이 국가를 통한 개혁 시도의 한계를 보여 주는 극명한 사례였다.

대통령이나 국회가 전체 국가기구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자본가들과 국가기구가 법과 선출된 정부를 통제한다.

따라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국가를 인수해서 사회변혁을 위해 이용할 수 없다. 자본주의 국가를 폐지하고 노동자 국가로 대체해야 한다.

노동자 국가는 역사상 최초로 생산과 분배 등 경제 영역과 정치 영역을 모두 대중이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사회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전체 사회를 대표하게 될 때, 국가는 불필요하게 되고 사라져 갈 것이다.

엔겔스의 말처럼, “사회는 자유롭고 동등한 생산자들의 결합의 토대 위에서 생산을 재조직할 것이며, 전체 국가기구를 그것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 즉 박물관에 물레·청동도끼와 나란히 놓을 것이다.”

강철구

자본주의와 복지 ③



사진 출처: Sinsler Dexter

보수당 정부의 복지 삭감에 맞서 싸우는 영국 노동자들 그러나 무상의료(NHS) 공격을 기획하고 시작한 것은 노동당 정부다.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편집자] 무상복지와 자원 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이 한창이다. 다섯 차례에 걸쳐 한국 사회와 복지에 대한 기사를 연재한다.

- ① 무상복지가 경제 위기를 낳는다?
- ② 사회투자국가론과 제3의 길
- ③ **보편적 복지와 고전적 사회민주주의**
- ④ 복지국가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 ⑤ 좌파적 대안

보편적 복지란 한 나라의 구성원 모두에게 적용되는 복지제도를 뜻한다. 그리고 보편적 복지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나라를 복지국가라고 부른다.

한국에서 예를 들자면 가난한 사람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기초생활보조제도는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고, 무상의료 제도가 도입된다면 이는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보편적 복지의 장점은 분명하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가 권리’라는 인식을 높여 노동자들이 복지를 요구하며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을 준다.

또 압도 다수가 노동계급인 사회에서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는 노동계급 전체에게 두루 이익이 된다. 선별적 복지는 노동계급 내에 소득 수준에 따른 구분을 만들어 불필요한 분열과 반목을 낳을 수 있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대체로 보편적 복지를 달가워하지 않는다. 국가의 보편적 복지 제공은 시장 개입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가 무상의료를 제공하려면 당연히 제약회사와 병원의 이윤 추구를 규제해야 한다. 정부가 보장성을 높이려고 아무리 세금을 많이 거둬도 제약회사와 병원이 요금을 올려버리면 말짱 도루묵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의료, 교육, 주택 등 필수재 영역에서 국가가 보편적인 혜택을 제공한다면 그만큼 시장은 축소될 것이다.

물론 이런 국가 개입이 결과적으로 언제나 자본가들에게 나쁜 것만은 아니다. 예컨대 제2차세계대전 이후 약 20년 동안 유럽 복지국가들은 국가 개입을 강화했는데, 이는 개별 자본가들의 노동력 재생산 비용(노동자들이 계속 일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비용 – 위생, 음식, 교육, 주거 등)을 절약해 주는 효과를 냈다. 오늘날 복지국가론자들이 말하는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은 이런 상황을 일면적으로 묘사하는 것이다.

첫번째 문제는 어떻게 자본가들이 이런 조건을 받아들이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건강하기를 바라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비용은 다른 이들 — 경쟁관계에 있는 자본가들이나 노동자들 — 이 치르기를 바란다.

따라서 단지 자본가들을 설득해 보편적 복지를 시행할 수 있다는 생각은 몽상이다. 이윤 중 일부가 아니라 존립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면 이들은 한사코 책임을 회피할 것이다.

유럽 복지국가들이 형성되던 무렵에는 이런 압력을 행사하는 강력한 계급투쟁이 있었다. 그런 투쟁에서 노동자들은 종파업 등을 통해 체제에 도전했고, 지배자들은 혁명을 피하기 위해 복지국가라는 개혁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개혁주의자들은 계급투쟁이라는 핵심 동력을 빠뜨린 채,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의 노선과 각종 계급 간 동맹·타협을 통해 복지국가를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고전적 사회민주주의의란 제1차세계대전과 러시아혁명을 전후로 마르크스가 말한 혁명적 전망 — 즉 기존 국가를 타도하고 완전히 새로운 노동자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는 — 을 폐기한 노동자 정당들의 이념과 정치적 실천을 뜻한다.

‘고전적’이라고 단서를 단 까닭은 현대의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대부분 ‘제3의 길’ 등으로 후퇴하며 신자유주의 정책을 수용했기 때문이다.

국가의 시장 개입

이들의 주장을 압축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본주의는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고 그렇게 돼 왔다. 고전적 사회민주주의를 대안으로 제시하는 최병천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은 이를 이렇게 표현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본적으로 수용하면서도, ‘보편적 복지국가’를 통해 높은 수준의 복지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그 사회는 … 자본주의적 강제 구조가 ‘절반 이상은’ 해소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둘째, 노동자들은 의회, 혹은 정부 기구를 장악함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고 셋째, 자신들의 정당을 통해 그 과제를 이룰 수 있다.

“보통선거권의 쟁취로 특징되는 민주화 국면이 열리면서 … [사회민주주의자]들은 ‘정치의 우선성’을 주목했기에, 의회주의, 개혁주의, 정치적 계급 동맹론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먼저 지난 수십 년 동안 선진국에서조차 부는 더욱 소수에게 집중됐다. “자본주의적 강제 구조” 즉, 노동자들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는 근본에서 전혀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더 많은 노동자들이 더 열악한 조건에서

착취당하고 있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집권이 국가의 성격을 바꾸지도 못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경찰, 군대, 사법부, 중앙은행 등)을 통제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영국 노동당 좌파의 이론가였던 랠프 밀리반드는 1972년에 쓴 영국노동당사에서 노동당 정부가 자본을 통제하기는커녕 시간이 지날수록 친자본가적 정책을 추진하라는 압력에 자신을 취약하게 만들어 왔다고 고백한 바 있다.

마지막으로, 집권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늘 국가와 계급 사이에서 갈등했다.

한편에서 그들의 목표는 국민 경제 성장 등 세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 잘 살아남는 것이었다.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얼굴을 한 자본주의’를 만들려 했다.

국가와 계급

호황기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장기 호황기에는 이 두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처럼 보였다.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되고 복지가 확대됐다.

사실 이 당시에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하지 않은 나라에서도 복지가 확대됐다. 세계적 규모의 호황은 노동자 투쟁에 밀린 자본가들이 당근을 내놓을 수 있게 해 줬다.

경기가 후퇴하자 이 아슬아슬한 균형이 무너졌다.

그리고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은 노동계급에게 복지를 제공하기보다 국가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우선순위를 뒀다. 이는 임금상승 억제, 재정 긴축, 생산성(착취율) 향상 등을 뜻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이 신자유주의에 굴복한 것은 이런 변화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한국에서 복지국가를 건설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유럽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걸었던 길에서 올바른 교훈을 이끌어내야 한다.

지금처럼 호황은커녕 경제 위기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자본가들의 압력에 휘둘리는 민주당과 연합해서 복지국가를 이루겠다는 것은 몽상에 가깝다. 사실 이런 전략을 추진하려다 보면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예전에 추진한 정책을 따라하기도 어렵다. 실제로 일부는 벌써부터 ‘제3의 길’ 수준의 복지 정책으로 후퇴하고 있다.

물론 한국의 진보정당들은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부들처럼 타락하지 않았다.

그러나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지금처럼 아래로부터 투쟁보다 계급 타협에 치중한다면 운동을 전진시키는 구실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장호중

왜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인상도 지지해야 하는가

최근 여기저기서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그동안의 '고통전담'을 만회하려 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2년간 임금동결을 강요당했던 공무원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에 더해 학자금 대출 등 추가적인 복지 확충을 요구하고 있고, 금융노조나 금속노조도 예년에 비해 높은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러자 이명박 정부는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 정규직"을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를 달가워하지 않는 것은 단지 정부나 우파들만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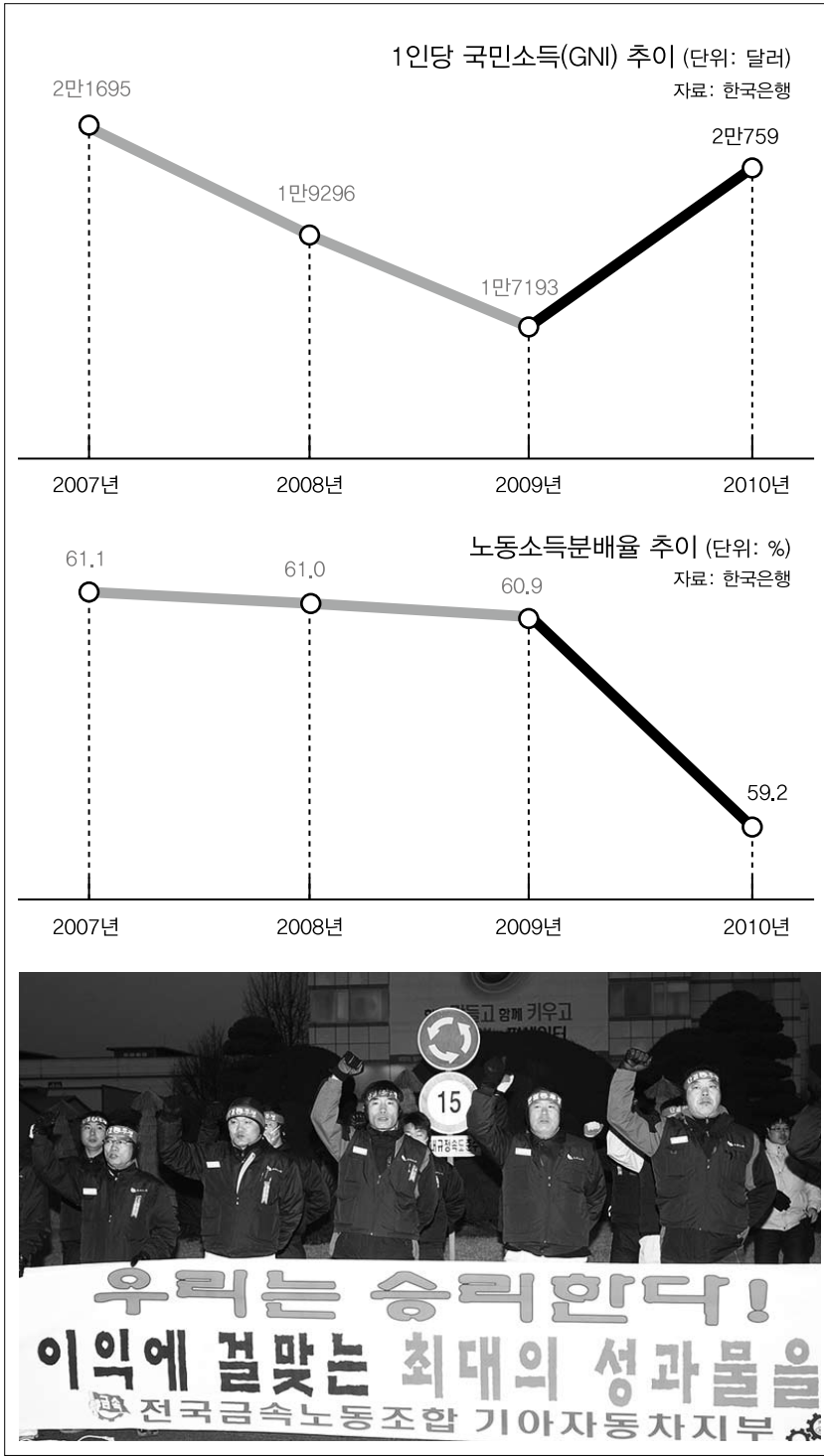
민주당과 자유주의 언론, 많은 시민사회단체들도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와 투쟁을 마뜩잖게 여기곤 한다. 심지어 일부 좌파들도 '대기업 정규직은 임금 인상보다 노동시간 단축을 요구해야 한다'며 두 가지를 대립시키곤 한다.

여기에는 대기업 정규직의 임금 인상이 노동자 간 격차를 더욱 크게 만든다거나, 노동자들의 단결을 어렵게 만든다는 등의 생각이 깔려 있다.

그러나 현대차와 기아차 등이 주조원의 현기증 나는 수익을 올린 상황에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은 그 자체로 정당할 뿐 아니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라도 이들의 투쟁이 필요하다.

대기업 정규직 또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이들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이명박 정부가 공무원 임금 동결을 추진했던 것도, 조중동이 현대차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에 팽쩡 뛰는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대기업 원청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수준은 하청업체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수준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 기업주



낮아진 노동소득분배율은 자본가들이 노동자 몫을 빼앗아 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단체인 경총이 매년 "대기업(노조)이 임금 인상을 주도했기 때문에 기업들의 평균임금이 올라갔다"고 불평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부 좌파들은 1997년 경제 위기 이후 '대형노조의 임금 인상이 중소기업과 미조직 부문에 혜택을 주던 시대 끝났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김유선 소장은 "노동조합의 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오면서 전반적으로 임금을 균등화하는 역할을 한다"(〈한겨레21〉 794호) 하고 말했다.

노동소득분배율

만약,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이 다른 부문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없다면 정부와 기업주들이 저토록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이간질하는 데 공들일 이유도 없을 것이다. 게다가 정규직의 임금 인상 자체와 '양보론'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투쟁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책임인 것도 아니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가 정규직 때문이라는 주장은 전체 노동자의 몫은 정해져 있는데 정규직이 더 가져가서 비정규직이 피해를 본다는 말이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지난 10여 년간 국민소득에서 전체 노동자에게 돌아오는 임금 몫인 노동소득분배율 자체가 정체하거나 떨어졌다. 특히 최근 5년 연속 줄어든 노동소득분배율은 지난해 59.2퍼센트로 2004년 이후 가장 낮았고, 감소폭도 36년 만에 최대치였다.

자본가 계급이 전체 노동자의 몫을 빼앗아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직력과 투쟁력을 갖춘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상대적으로 자신들의 몫을 잘

지켜냈다고 해서 격차 확대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따라서 대기업 정규직이 비정규직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익을 얻는다는 주장은 악선동일 뿐이다.

저들은 비정규직의 열악한 처우를 들먹여 정규직을 비난할 때조차 비정규직에게 양보할 의사가 손톱만큼도 없다. 고용노동부가 정규직을 비난하면서 동시에 "최저임금이 높아 기업들이 지키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 요구도 일축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정부와 기업주들은 자신의 이윤을 지키려고 전체 노동자의 임금 인상 요구를 회피하고 무마하는 방편으로 정규직 대기업 노동자들을 공격해서 고립시키려 한다. 대기업 정규직의 투쟁이 비정규직 미조직 부문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막으려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맞서 전체 노동자의 이익을 방어하는 투쟁에서 조직력과 투쟁력이 있는 대기업 노조의 임금 인상 투쟁은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는 저들의 이간질과 악선동에 흔들리지 말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 이런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의 자신감과 조직이 강해지고, 정치적 시야도 트이기 마련이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과의 연대 투쟁에 나설 자신감도 이런 투쟁 과정에서 확대될 수 있다.

그리고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도 자신들의 임금 인상뿐 아니라 비정규직과 미조직 노동자들의 요구를 함께 내걸고 싸워야 한다. 당면한 최저임금 인상 투쟁에서부터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힘을 보태야 한다. 그럴 때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는 시도는 더 힘들어질 것이고, 노동자들 전체의 이익도 늘어날 것이다.

정종남

투쟁 건설에는 도움이 안 되는 야권연대

4·27 재보선이 보여 줬듯이 야권연대가 선거에서 이명박을 패배시키고 진보진영이 선거에서 실리적인 성과를 얻는데 일정한 효과를 내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계급연합하는 전략은 선거보다 훨씬 중요한 대중 투쟁의 발전을 가로막는 효과를 내고 있다.

올해 등록금 투쟁에서도 이것이 나타나 왔다. 올해는 여러 학교에서 몇 년 만에 전체 학생총회가 성사되며 등록금 인상 반대 투쟁이 벌어졌다. 지난 10년간 등록금이 두 배로 올라 학생들의 고통과 불만이 컸고 이명박의 레임덕 속에 자신감도 서서히 올라갔기 때문이다. 전 사회적 관심과 지지 여론도 높았다.

몇몇 대학에서는 총회 이후에도 투쟁이 이어졌다. 서울에서만 대학교 거의 열 곳에서 학생총회가 성사됐는데, 이렇게 여러 학교가 동시에 점거 농성 등으로 투쟁을 발전시켰다면 훨씬 큰 압력을 가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한대련 지도부는 대학 당국에 맞서는 투쟁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려 하기보다는, 4월 들어서는 1인 시위, 국회의원 서약 운동 등으로 투쟁 방향을 전환했다. 대정부 투쟁을 벌여야 한다는 이유였다. 그리고, '대정부 투쟁'은 사실상 민주당과 손 잡고 의회와 정부를 장악해서 관련 법안 통과시키기를 뜻했다.

'민주당과의 연립정부를 통한 집권'이 눈앞에 다가오는 듯해 투쟁을 보조 수단



민주당에 헛된 환상을 부추길 게 아니라 단호하게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으로 여기는 경향이 더 커진 것이다.

'반값 등록금' 같은 당장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는 허황된 구호를 내세우며 당장의 구체적 투쟁 과정을 외면하는 일이 계속됐다.

대선과 총선

한대련은 5월 28·29일 '한대련 대회'를 준비하면서도 "지금 대학생의 말을 듣지 않으면 '1년 뒤에 큰일난다!'는 것을 보여 주자"고 말한다. 대선과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하대, 고려대 등 총회 이후 점거 등을 하며 투쟁을 지속하려고 노력한 대학들에 대한 실질적인 연대는

건설되지 않았다.

한대련 지도부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고려대, 이화여대 총학생회 활동가들도 학내 투쟁을 더 진전시키기를 주저하는 태도를 보이며 적절한 수준에서 투쟁을 마무리하고 싶어 했다.

결국 고려대, 이화여대에서는 등록금 인상률을 낮추지는 못한 채 학교 측의 일부 양보안을 받으며 투쟁이 정리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노동자 운동에서도 최근 민주당과 계급연합 전략(야권연대)은 투쟁의 요구를 제한하고 감을 빼는 구실을 하고 있다.

얼마 전 민주노총은 민주당과 함께 노조법 개정을 추진하기 위해 이제까지 제

기해 오던 8개 요구 중 손배가압류 제한, 산별교섭 법제화, 필수유지업무 폐지 요구를 제외했다.

그러나 한EU FTA에서 민주당이 야권연대 합의 내용을 내팽개치고 사실상 FTA를 통과를 방기한 것을 볼 때 노조법에서 민주당과 합의한 5개 요구마저 믿을 수 있을까?

헛된 환상

민주당에 대한 헛된 환상을 부추기며 투쟁 동력을 갉아먹는 것은 선거라는 작은 전투에서 승리하려고 계급투쟁이라는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을 자초하는 길이다.

이미 지난해 KEC, 현대차 비정규직 투쟁 등에서 야권연대를 바탕으로 한 국회의원들의 개입은 노동자들에게 점거 투쟁을 점이라고 압력을 넣는 구실을 했다. 결정적인 시기에 점거를 푼 KEC 노동조합은 투쟁에 돌파구를 찾지 못했고, 최근 노동자들이 노조를 집단 탈퇴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좌파 활동가들은 야권연대의 문제점을 비판하면서 아래로부터 노동자와 학생들의 투지와 자신감을 높이려고 노력해야 한다. 투쟁하는 노동자와 학생들의 자신감이 높다면 야권연대가 투쟁에 브레이크를 거는 구실을 하기 힘들 수 있다.

전주 버스 노동자들은 개혁주의 지도부가 야권연대를 추구하며 투쟁 건설을

회피하는 시기에도 단호하게 투쟁하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전주 버스 노동자들이 1백40일 동안 온갖 탄압에 맞서며 파업을 벌였지만 민주노동당 중앙당은 파업 지지 성명 하나 내지 않았다. 민주노총 지도부도 위력적인 연대투쟁 건설을 소홀히 했다.

그러나 전주 버스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하려는 의지가 컸고, 민주당 지방정부에 느끼는 배신감도 컸기 때문에 단호하게 투쟁했다. 이런 투쟁은 민주노동당의 지역 활동가들로 하여금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며 민주당을 비판하게 만들었다.

4·27 재보선 때도 전주 지역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독자적인 진보 후보를 내서 민주당을 비판하고 버스 파업을 옹호했다.

전주 버스 노동자들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꺾끄러워 하는 것도 무릅쓰고 손학규 낙선 운동을 경고하며 민주당을 과감히 공격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다.

전주 버스 사례에서 보듯 야권연대를 뛰어넘어 투쟁을 진정시킬 수 있는 힘은 노동자·학생 들의 투지와 자신감에 달려 있다. 좌파 활동가들은 선진적인 노동자·학생 들과 소통하면서 노동자·학생 들의 자신감을 고무하며 투쟁을 진전시키려 해야 한다.

정선영

서구 열강들은 오랫동안 중동에서 만행을 저질러 왔다. **리처드 시모어**가 최근 중동 혁명 발발에 대응해 서방 열강들이 이 지역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 어떤 새로운 전략을 짜고 있는지를 고찰한다.

알 카피네는 이렇게 말한 바 있다. “친절한 말보다는 친절한 말에 총을 더했을 때 원하는 것을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미국 정부는 이 말의 의미를 잘 알고 있다.

2009년 미국 상원의원 조지 미첼은 튀니지를 방문해 독재자 벤 알리에게 오바마의 따뜻한 안부의 인사를 전했다. 같은 해 오바마는 하원에서 벤 알리에게 무기를 판매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자기 말을 뒤킴참하려 했다.

2010년 11월 미 국무장관 힐러리 클린턴은 호스니 무바라크에게 따뜻한 인사를 건네면서 미·이집트 관계가 “안정과 안보의 초석”이라고 평가했다. 몇 달 뒤에 이집트에서 대규모 시위가 시작됐을 때, 미국 부통령 조셉 바이든은 무바라크가 미국의 “동맹”이지 “독재자”가 아니라고 우겼다. ‘중동 평화 4자 회담’(유엔, 유럽연합, 미국, 러시아)의 특사인 토니 블레어는 이 독재자를 가리켜 “매우 용감하며 선한 자”라고 평가했다.

1978년 캠프데이비드협정을 체결한 뒤부터 이집트 국가는 미국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지원금, 무기와 고문 기구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이 협정으로 이집트와 이스라엘 사이에, 다시 말해 이집트와 미국 사이에 동맹관계가 확립했다.

이런 지원 덕분에 무바라크는 1981년부터 쭉 이집트를 통치할 수 있었다. 그는 IMF의 처방전도 수백억 급격한 고용의 비정규직화와 농촌 노동자들의 빈곤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과 서방 동맹국 정부들이 보기에 그것이 아랍이 바랄 수 있는 최선의 상태였다.

그러나 ‘배은망덕한’ 튀니지인과 이집트인 들은 자국 독재자들을 뺀 채버렸다. 이 두 나라 항쟁에서 노동계급은 두드러지는 중요한 구실을 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벤 알리 정권의 일부인이었던 노동조합들은 정권과 노동자들 사이의 사회적 협력이 무너지자 튀니지 혁명에서 지도적 구실을 했다.

이집트의 경우 마할라 방적 공장 투쟁으로 시작된 노동계급 반란은 2011년 1월 항쟁을 낳은 배양제 구실을 했다. 석유 산업, 정부 각 부처, 수에즈 운하 공사, 철도, 청소년 노동자 들로 파업이 확산된 것이 무바라크 정권을 마비시키고 그의 지지자들을 분열시키는 결정적 구실을 했다.

중요한 것은 이런 파업들이 경영진에서 부패한 집권당 인사들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정치적이었던 것이다. 지금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등 정치조직들이 나타난 것도 놀랍다.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도시 안의 도시이자 무바라크의 이집트에 맞서는 살아 있는 대안으로서, 21세기판 코뮌으로 변모했다. 지역 조직화와 치안을 위해 방방곡곡에서 민중위원회들이 구성됐다.

미국 정부가 이 독재 정부들을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지지했음에도,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무너졌다. 곧이어 오바마가 자유에 관해 일장 연설을 한 것은 정말 관대하게 말해 허둥지둥 태도를 바꾼 것으로,

중동 혁명과 제국주의



4월 말 리비아 벤가지를 방문한 미국 공화당 의원 존 맥케인 이라크 침략을 지지한 제국주의자의 변방인 사기꾼

전혀 그럴듯해 보이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자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긴 중동 패권을 잃고 있었다.

리비아 민중의 무장 항쟁

한편, 리비아에서 중요한 일이 일어났다. 2011년 1월 부패와 추악 부패에 항의해 벤가지와 다르나 등 주로 동부 연안 소도시와 도시 들에서 시위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웃 국가들의 눈부신 혁명에 영감을 받은 일부 정치 활동가들은 더 과감한 행동을 요구했다. 2월 초에 언론인 자말 알 하지와 변호사 파티 테르빌 같은 중간계급 출신 인권 활동가들은 정치적 자유 확대를 요구하는 시위를 조직했다. 리비아 반란이 시작된 2월 15일 저녁, 경찰들은 벤가지에 있는 등 정치적이었던 것이다. 지금 사회와는 전혀 다른 사회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등 정치조직들이 나타난 것도 놀랍다.

카이로의 타흐리르 광장은 완벽하게 작동하는 도시 안의 도시이자 무바라크의 이집트에 맞서는 살아 있는 대안으로서, 21세기판 코뮌으로 변모했다. 지역 조직화와 치안을 위해 방방곡곡에서 민중위원회들이 구성됐다.

미국 정부가 이 독재 정부들을 무너뜨리기 직전까지 지지했음에도, 이들은 놀라울 정도로 신속하게 무너졌다. 곧이어 오바마가 자유에 관해 일장 연설을 한 것은 정말 관대하게 말해 허둥지둥 태도를 바꾼 것으로,



이집트 카이로 메이데이 시위 진정한 리비아 혁명의 동맹

상대로 무장별 발표했고 덕분에 정치적 투쟁이 순식간에 무장 투쟁으로 변했다.

2월 25일 반정부 세력이 수도 트리폴리와 카다피 고향인 시르테를 제외한 리비아 대부분을 통제하게 된 듯이 보였다. 주로 엘리트와 카다피 정부 이탈 인사 들 — 군 장교, 기업인, 학자, 기타 전문직 종사자 들 — 로 구성된 과도위원회가 형성됐다. 과도위원회는 항쟁에 참가한 다양한 사회세력들을 하나의 기구로 통합하려 했다.

지금까지 카다피는 자기 정권에 맞선 모든 저항을 탄압해 왔다. 따라서 리비아 시민사회 진영에는 저항을 주도할 노조나 정당도 없었다. 리비아 전역에서 민중위원회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파편화된 형태의 민중권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잘 조직된 엘리트들이 공백을 메우려 들었다. 리비가 전국을 포괄하는 대표단들을 초청했

다는 이들의 구성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

들은 반란을 독점적으로 대변하는 구실을 할 수 없었고 동부 연안 지역 근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과도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사들은 여전히 주로 엘리트들에서 충원됐고, 이들은 전략을 둘러싸고 서로 의견이 이합치 않

을 뿐 아니라 사적인 권력투쟁 — 대표적으로 카다피의 사유화 정책을 지휘했던 마흐무드 자브빌, 전 법무 장관 무스타파 압델

자림까지 카다피는 자기 정권에 맞선 모든 저항을 탄압해 왔다. 따라서 리비아 시민사회 진영에는 저항을 주도할 노조나 정당도 없었다. 리비아 전역에서 민중위원회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은 파편화된 형태의 민중권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잘 조직된 엘리트들이 공백을 메우려 들었다. 리비가 전국을 포괄하는 대표단들을 초청했

다는 이들의 구성은 실현되지 않았다. 그

들은 반란을 독점적으로 대변하는 구실을 할 수 없었고 동부 연안 지역 근거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게다가, 과도위원회를 구성하는 인사들은 여전히 주로 엘리트들에서 충원됐고, 이들은 전략을 둘러싸고 서로 의견이 이합치 않

잡았지만, 오래지 않아 카다피가 다시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고 반란 세력의 약점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 처음에 반란 세력을 지지했던 와르팔라 부족은 다시 정부 쪽으로 넘어갔다. 이제 미국과 일부 유럽 동맹국 정부들은 그때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전략을 놓고 서로 단결할 수 있었다. 그들은 리비아 투쟁을 통제하면서 이것을 자신의 이익에 맞춰 이용하기 시작했다.

미제국주의와 중동 패권

중동 통제 문제는 영국 제국이 쇠퇴하기 시작한 뒤부터 미국 정책 입안자들을 괴롭혀 온 문제였다. 제2차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영국 자본주의는 대단히 약해졌고 식민지 당국들은 곳곳에서 펼쳐지는 반식민지 반란에 대처하느라 악전고투하고 있었다.

미국 정부는 종종 이런 영국의 약점을 이용했다. 예컨대, 미국 정부는 이집트에서 나세르가 주도한 자유장교단의 반(反)영 반란을 묵인했다. 반대로, 1969년에 리비아왕립군의 자유장교단이 쿠데타를 일으킬 때까지 또 다른 친영 국왕인 이드리스를 지원했다.

미국 정부가 1952년과 1969년에 다르게 대응했던 것은 그동안 중동 독립국들이 천연자원, 특히 석유 자원 국유화를 추진하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를 더 곤란하게 만든 것은 베트



6. 보안군의 대대

남 전쟁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영국 제국이 ‘수에즈 동쪽’에 대한 책임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었다. 영국 정부는 걸프 지역에서 영국 화폐를 사용하는 중동국들의 네트워드를 지원해 온 영국 해군을 철군하기로 결정했다.

미국 해군이 영국이 해 온 제국 군대의 의무를 대신 실천하기 시작했고, 달리 외교가 영국 통화 후원 체제를 대체했다. 냉전 종식 이후 미국 우익들은 주요 도전자가 없는 틈을 타 중동 지역을 미국 이익에 맞게 재편하려 했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 정권을 파괴하고 그 잔해 위에 친미 ‘자유시장’ 국가를 세우려

는 계획을 중심으로 단결했다.

이런 모험의 결과로 미국 정부의 중동 패권이 처음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미국·유럽 동맹에 처음으로 심각한 균열이 생기고, 러시아가 기지개를 켤 수 있었다. 오바마의 임무는 이런 패해를 복구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불행히도 그는 미국 제국이 역사상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에 직면하기 직전에 대통령직을 맡았다.

미국 정부는 오랫동안 경제 제재와 폭격 등을 통해 리비아 국가를 약화시키려 노력했다. 2000년대 들어서자 미국 정부는 카다피 정부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할 수밖에 없었다. 혁명 이후 카다피 정부는 보수적 농촌 엘리트, 석유·은행·수입 부문의 기업인, 국가 기관 동료 들을 매수해 지지기반으로 확보했다. 카다피르, 와르팔라, 마르가르하 등 3대 부족들이 정권의 핵심 지지자 구실을 했

으며 했다. 미국 정치인과 안보 전문가 들이 리비아에 대한 군사 개입을 논의할 때, 반란군 통제 지역에는 ‘외국 개입 반대한다’는 영어 현수막이 걸렸다.

과도위원회의 하피즈 고가는 단도직입적으로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외국 개입에 전적으로 반대합니다. 리비아 민중이 리비아 나머지 지역을 해방할 것이고, 그들이 카다피 보안군을 일소할 것입니다.” 3월 6일 벤가지에 도착한 영국 특수부대원들은 바로 체포당했다. 반란 세력은 카다피가 반란을 제국주의의 음모라고 주장하면서 지지를 회복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다.

자위아 같은 주요 도시들에서 반란 세력이 군사적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고서 제국주의 개입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반란 세력은 트리폴리와 시르테로 반란을 확산시키고 정권을 철저히 분열시킨다는 생각을 포기했고, 제국주의 국가의 지원이 반군 동맹의 약점과 과도위원회의 권위 부족을 보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기기 시작했다.

미국 정부는 리비아 개입을 놓고 분열한 듯이 보였다. 한편에는 개입에 반대하는 ‘현실주의자’인 국방부 장관 로버트 게이츠가 있었고, 다른 한편에는 유엔 주재 미국 대사인 수전 라이스 같은 호전적 자유주의자가 있었다. 초기 나토 폭격을 지휘한 미국 아프리카사령부(Africom)의 사령관인 카터 햄 장군은 원래 미국의 개입을 탐탁치 않게 생각했다. 오히려 영국과 프랑스 정부가 미국 정부보다 리비아 개입에 훨씬 더 적극적이었다.

그러나 3월 17일 미국 정부는 유엔의 지지를 받은 호전적인 개입안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 CIA 첩보원과 특수부대원 들은 반란 세력과 협상하려고 리비아 땅을 밟았다. 서방 열강들은 만약 카다피가 벤가지를 점령하면 엄청난 대확살을 저지를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공중 폭격을 정당화했다.

남치 당한 혁명

물론, 카다피는 잔인한 반격을 지속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반란 세력으로 이탈한 전 대사인 이브라힘 나세리가 주장하듯이 ‘인종 청소’를 낳았을 것이라는 주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리비아 개입을 ‘인도주의적’ 근거로 정당화하면서 이것의 정치적 측면은 감춰졌다. 만약 대량 살상을 막는 것이 개입의 목표였다면 적대 행위 중단을 위한 협상을 벌이는 방법도 있었다. 카다피는 자신이 리비아를 정치적으로 통치할 수 있는 조건으로 휴전안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었다. 따라서 진정한 정점은 리비아 혁명이 순리해 민중 세력이 리비아를 통치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닐지였다.

당시 미국 정부는 바레인과 예멘에서 반혁명 세력을 지원하고 있었다. 그중이 튀니지와 대항 후원 관계를 이리저리 바꾸는 것을 본 뒤 카다피의 “탁월한 전술적 감각”을 칭찬했다. 따라서 경제 제재의 대가가 너무 크다 — 1990년대 대략 3백억 달러 — 고 판단한 카다피가 미국 정부와 관계 개선에 나섰을 때, 미국 정부는 뒤뚱수를 맞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2004년 부시와 블레어는 두 발 떨어 카다피를 환영했고 리비아 엘리트들은 유럽과 미국 엘리트 들과 활발히 교류하기 시작했다. 예컨대, 런던정경대를 졸업한 카다피 아들 알 이슬람은 앤드류 왕자와 피터 만델슨의 절친이 됐다.

리비아 혁명의 목을 조르기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끝내 카다피 정권을 버리지 못할 정도로 리비아 정권에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반카다피 세력의 대변자 구실을 자임하는 전 카다피 정부 인사들은 미국과 유럽연합 정부와 동맹관계를 맺는 데 적극적으로 임했던 자들로, ‘친서방’으로 알려져 있다. 과도위원회의 일부 인사들은 처음부터 미국 정부와 손을 잡고 카다피를 무너뜨리려 했다. 예컨대, 압둘 파타 유니스 장군은 3월 1일에 지상군은 안 되지만 우리가 카다피 군대를 폭격하는 것은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리비아 반란 세력의 기층을 구성하는 세력들은 이런 주장을 즉각 받아들이지 않

연속혁명 ②

러시아 혁명을 통한 검증

아랍 혁명은 연속혁명으로 발전할 때 혁명이 제기한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연속혁명 연재 두 번째 글에서 에스미 추나리는 1905년 러시아혁명이 마르크스주의 이론에 끼친 영향을 살펴본다.

사회주의자라면 대부분 혁명에 참여하게 되길 꿈꾼다. 혁명이 레온 트로츠키는 두 번 — 1905년과 1917년 러시아혁명 — 이나 참여해 지도적 구실을 맡았다. 1905년 혁명은 젊은 트로츠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노동자 운동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영향을 받았다. 1905년 혁명을 촉발한 것은 빠르게 확산된 거대한 파업 물결이었으며 군대의 반란과 농촌의 봉기로 번졌다.

노동자들은 또한 러시아 최초의 민주적 기관인 소비에트, 즉 노동자 평의회를 수립했다. 그들은 소비에트 안에서 전술을 논의하고 노동자 투쟁을 조직했다.

투쟁의 한복판에 있었던 트로츠키는 당시 러시아의 수도인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소비에트 의장으로 선출됐다.

결국 1905년 혁명은 탄압으로 파궤했지만, 이 혁명은 노동자들이 투쟁의 주역임을 확고히 증명했다.

또, 러시아에서 가능한 혁명은 어떠한 혁명인가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졌다.

러시아는 당시까지만 해도 전제 군주가 통치하는, 인구 대다수가 농민인 농촌 경제였다.

사회주의자들 대부분은 낡은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를 일정에 올리기에 앞서 의회주의적 자본주의 시기를 통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트로츠키의 견해는 달랐다. 그는 ‘연속혁명’ 이론을 제기했다. 트로츠키는 1905년 경험을 고찰하면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주의의 틀을 넘어서 사회주의의 가능성을 현실화할 만큼 충분히 강력하다고 주장했다.

트로츠키는 노동자들이 차르(러시아 황제)에 맞서는 성공적인 투쟁을 이끌면서 더 많은 정치적 자유를 얻어낼 수 있는 유일한 집단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주의 자본가들은 급진적 변화를 너무 두려워했고 농민들은 변화를 위한 투쟁의 중심에 서기에는 개인적 생산에 너무 매여 있었다. 반대로, 노동자들은 정치적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는 차르에,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쟁에서는 자본가들에 맞서 싸워야 했다.

따라서 노동자들에게는 자유로운 사회를 향해 혁명을 추진할 힘과 이해관계가 모두 있었다.

불균등결합발전

트로츠키는 러시아의 발전을 세계경제 속에서 분석했다. 자본주의는 서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등장한 지 한참 뒤에 러시아에 도입됐다. 러시아에서 자본주의의 발전은 서유럽과 똑같은 단계, 즉 소규모 작업장에서 더 크고 선진적인 기업들로 나아가는 과정을 밟지 않았다. 오히려 아직 인구 대다수가 농민인 러시아에 최신품이 바로 도입됐다. 이 때문에 발전 중인 러시아 경제 한가운데에 응집된 강력한 노동자 집단이 형성된 것이다.

트로츠키는 이 과정을 ‘불균등결합발전’이라고 불렀다. 세계 여러 지역마다 발전의 속도가 제각기 달랐기 때문에 발전 과정은 불균등할 수밖에 없다.

또, 발전은 발전의 여러 단계들이 압축되거나 서로 다른 발전 단계들이 나란히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결합 발전’이었다. 사방으로 자본주의가 확산되면서 세계는 변했지만 불균등결합발전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세계의 질적 특징이다.

대부분의 남반구 나라에서는 선진적인 기술과 제조 방식이 자급적 농업이나 대규모 슬럼가와 함께 상존한다.

이런 발전의 단계들이 한데 밀집되면서 폭발적인 정치적 혼란 상태가 이뤄진다.

트로츠키는 연속혁명의 발생이 필연적이라고 주장하지는 않았다. 연속혁명은 결정론이 아니었다. 그는 러시아든 다른 나라에서도 혁명이 살아남으려면 국제적으로 확산돼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파괴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트로츠키의 이론은 1917년 러시아 2월혁명으로 차르가 무너지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자 그 올바른이 입증됐다.

그러나 그 혁명으로 노동자와 농민이 직면한 문제들, 즉 공장에서의 착취, 농촌의 절망, 제국주의 전쟁이 해결되지는 못했다. 무엇을 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여러 주장들이 난무했다. 10월에 이르자 상황은 양극화했고 불세비키 당으로 조직된 노동자들은 혁명을 전진시켜 노동자 국가를 수립했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반동 세력이 운동을 파괴했을 것이다. 10월혁명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가장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사회가 출범했다.

러시아혁명을 시발로 유럽과 식민지들에서 투쟁이 급증했다.

그러나 러시아혁명은 독일혁명 등이 실패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됐고 러시아의 침략, 내전, 기근으로 교살됐다. 덕분에 스탈린이 부상했고 혁명은 파궤했다.

오늘날에도 트로츠키의 사상은 여전히 매우 유용하다. 연속혁명 이론은 변화를 가져 올 핵심 세력이 노동자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 사상은, 진정한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정치적 자유뿐 아니라 경제적 자유를 위한 투쟁이기도 함을 보여 준다.

출처: 영국의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위크) / 번역: 천형석

9월 21일

마르크스21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지향하는

계간

마르크스21

9월호(2011년 8월)

가격 : 16,000원

알리언, 에스24, 인피닉스, 코보몬트, 영웅문고, 반덴마크스 등에서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구입처는 웹사이트를 참조해 주세요.

구독 문의 | 전화 02-2268-7608, 이메일 marx21@marx21.or.kr, 웹사이트 http://www.marx21.or.kr

아랍 혁명 특집호 : 세계를 뒤흔든 아랍 혁명 — 의미와 전망

아랍 혁명의 귀환 _ 알렉스 캘리니코프

이집트 혁명의 제1막 _ 랄림 마클랏

독재 정권의 무덤을 판 사람들 _ 엘 알렉산더

튀니지의 민중 혁명 _ 산제마르 모나스루

리비아 혁명, 어떻게 볼 것인가? _ 김하영

아랍 민족주의의 부상과 좌절 _ 엘 알렉산더

나세르에서 무바라크까지 _ 에릭 루디

이집트 민주화 운동 _ 라말 엘 마흐디

이슬람주의의 과거와 현재 _ 사에 나기브

21세기 혁명의 현실성을 보여 준 아랍 혁명 _ 김민석

쟁점:

다시 불거지는 유럽 재정 위기 _ 이창구

미르크스주의 교전 위기: (프랑스 내전)

파리 코뮌, 최초의 노동자 국가 _ 이현주

정가구독료

1년 64,000원 | 2년 120,000원 | 3년 180,000원 | 5년 300,000원 | 7년 420,000원 | 10년 600,000원

아랍 혁명의 불길이 팔레스타인으로 번져 가다

5월 14~15일 이스라엘군이 이스라엘 국경 지대에서 행진하던 팔레스타인 시위대를 향해 발포해 수십 명을 죽였다.

가자와 서안의 팔레스타인 주민들과 시리아·레바논·이집트의 팔레스타인 난민들은 '나크바'[아랍어로 '재앙'이라는 뜻.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인들을 몰아낸 날을 일컬음을 가리며 시위를 벌였다.

나크바는 1948년에 일어났다. 당시 이스라엘 건국을 위해 팔레스타인 사람 수십만 명이 자기 집에서 쫓겨났다.

이날 중동 곳곳에서 벌어진 나크바 기념 시위는 최근 벌어진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혁명에 자극을 받아 규모도 크고 분위기도 전투적이었다.

5월 15일 이집트 시위에서 이집트군은 도로를 봉쇄하고 시위 참가자들이 가자에 인접한 이집트 라파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인 수천 명은 이집트인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카이로의 이집트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불법

이집트 혁명 기간에 시위 참가자들은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라는 요구를 빈번히 제기했다. 5월 15일 시위에서 이집트 육군과 헌병은 최루탄, 고무탄, 실탄을 발사했다. 최소한 한 명이 죽고 1백 20명이 다쳤다.

시리아에서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는 골란 고원으로 몰려들었다. 이날 시위에서 이스라엘군의 진압으로 열 명이 죽고 수십 명이 다쳤다.

레바논에서는 난민촌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국경으로 몰려들었고 열두 명이 죽었다. 레바논 사람들도 이날 시위에 참가했다.

서안 지역 라말라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바리케이드에 불을 지르고 이스라엘군을 향해 돌을 던졌다. 이스라엘군은 실탄을 쏘고 네 명이 다쳤다.

이번 중동 혁명으로 이스라엘의 중동 패권은 타격을 입었다. 쫓겨난 이집트 독

재자 호스니 무바라크는 이스라엘의 매우 중요한 동맹이었다.

팔레스타인 조직 하마스와 파타의 단결도 이스라엘에게는 위협이다. 이에 대응해 이스라엘은 5월 1일부터 팔레스타인자치당(PA)을 '대신해' 권어 온 세금을 팔레스타인에 넘기지 않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스라엘 정부는 여전히 '외교적 해결'을 꿈꾸는 서방 정부의 압력을 받고서야 돈을 넘겨 줬다.

이스라엘 국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삶의 모든 면을 통제한다. 이스라엘이 세운 분리 장벽은 이스라엘과 국경을 맞댄 서안 지역 도시와 마을의 삶을 지배한다. 팔레스타인 어린이는 이스라엘 병사가 운영하는 검문소를 통과해야 등교할 수 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생필품 — 건축 자재에서 식료품까지 — 수입을 '테러 방지' 명목으로 방해한다.

많은 가자 주민은 비밀 지하 통로를 통해 이집트에서 들여온 생필품으로 생존한다.

팔레스타인 조직들의 단결과 팔레스타인 억압에 협조하던 정권들에 맞선 항쟁들의 발생은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집트 혁명은 여전히 중요하다. 이집트 군사 정부는 가자로 통하는 라파 건널목을 영구적으로 개방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군부가 시위대를 진압한 것을 봤을 때, 이 혁명의 요구를 성취하려면 여전히 기층 투쟁이 필요하다.

선 러덕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김용욱

읽어 볼만한 책

《이집트 혁명과 중동의 민중 반란》



알렉스 캘리니코스·
이집트 사회주의자 외,
책갈피,
176쪽, 8천 원



이집트 카이로의 나크바 기념 시위 아랍 혁명의 에너지와 반이스라엘 투쟁이 만난다.

사진: G. Ibrahim

빈 라덴 암살 이후

미국과 파키스탄의 추악한 동맹이 갈라지고 있다

오사마 빈 라덴을 암살하기로 결정한 덕분에 바락 오바마는 미국 내에서 추락하던 지지율을 만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오바마의 행동은 파키스탄에서 큰 위기를 낳았고, 미국의 충성스런 동맹으로서 파키스탄의 지위를 뒤흔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심지어 최근 파키스탄 샤프카다르에서 일어난 탈레반의 보복 공격에 대한 반응을 봐도, 파키스탄인들은 주로 미국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사람들은 미국 정부와 파키스탄 정부가 '테러와의 전쟁'을 파키스탄 국내로 들여왔다고 비난했다.

이 '전쟁'과 연관된 폭력 사태로 지난 10년 동안 파키스탄인 3만 명이 죽었다.

그중 최소한 9천 명은 파키스탄군의 손에 죽었다. 파키스탄군은 미국의 요청으로 아프가니스탄 국경을 통제했고 발루치스탄에서는 거의 내전을 벌였다.

미국 해군이 손쉽게 파키스탄 주권을 무시한 것도 큰 분노를 샀다. 이것은 미국 무인 폭격기 공격으로 죽는 사람의 수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결합됐다.

기층 분노를 달래려고 파키스탄 정치인들은 자기들이 더는 서구 열강의 폭도 각시가 아님을 열심히 증명하려 한다.

최근 있었던 의회 토론 과정에서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는데, 파키스탄 정치인들은 파키스탄의 항구 도시 카라치와 카이버 고개를 통과해 아프가니스탄으로 연결되는 나토 보급로를 폐쇄할 것을 요구했다.

이것은 매일 탄약 수천 톤을 사용하는 전쟁에 재앙적 타격을 입힐 것이다.

미국 주인

압력을 받은 파키스탄 군부도 자신이 미국 주인에게 대들 수 있음을 증명하려 한다.

한 파키스탄 국회의원은 파키스탄 신문 〈둔〉과 한 인터뷰에서 파키스탄 공군 참모총장이 공군조종사들에게 빈 라덴의 시신을 파키스탄 밖으로 운반하던 미군 헬리콥터를 격추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대응이 너무 느려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고 말했다.

한편, 파키스탄 합동참모총장 칼리드 원은 워싱턴 방문 일정을 취소했다. 파키스탄 장군이 미국 장군을 일썩이는 사진이 파키스탄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두려웠을 것이다.

파키스탄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자 오바마는 파키스탄을 진정시키려고 상원의원 존 케리를 파키스탄에 특사로 파



중국-파키스탄의 관계 강화 오바마 정부의 오만이 낳은 후폭풍

견했다.

그러나 공화당 정치인들 때문에 케리가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화당 정치인들은 오바마가 람보 흉내를 내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속편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아이만 알아와하리는 어디 있고 언제 그를 제거할 것인가?” 하고 질문하며 빈 라덴의 부관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그가 파키스탄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또 다른 암살극을 벌이지 않는 이상 오바마가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파키스탄에 해마다 제공하는 ‘군사 원조’ 수십억 달러의 지급을 재고하는 것이다.

그러나 파키스탄은 국제 미아가 아니다. 파키스탄 총리 유사프 라자 길라니는 이번 주 중국을 방문할 것이다.

파키스탄 퇴역 장성인 탈라트 마수드는 외신과 한 인터뷰에서 “중국은 빈 라덴 암살 작전 이후 파키스탄의 편을 든 유일한 나라다” 하고 말했다.

“미국이 파키스탄에 가하는 압력을 덜어주는 수단이 될 수 있기에 이 방문은 매우 중요하다. 파키스탄 정부도 미국 정부를 향해 ‘우리로 협상 카드가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미국과 인도도 계속 파키스탄에 압력을 넣으면 파키스탄은 ‘중국이 우리를 지원한다. 우리가 고립됐다고 생각하지 말라. 잠재적 초강대국이 우리편이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주요 무기 구입처다. 파키스탄 정부는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국과 관계가 가까워진 인도의 위협을 약화시키는 구실을 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중국 정부는 또한 파키스탄에 원자로를 건설해 주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열강을 이용해 또 다른 열강을 견제한다는 계획은 대단히 위험하고 ‘테러와의 전쟁’이 파키스탄으로 더 확산되는 연쇄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지난 1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에서 벌어진 일들은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지는 서막에 불과하게 보일 것이다.

유리 프라스드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김용욱

자본주의와 빈곤의 뿌리

최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빈곤’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아마 처음엔 아프리카가 떠오를 것이고, 잠시 후 ‘제3세계 빈곤’이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생각해 낼 것이다. 그리고 아랍 혁명과 빈곤의 연관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고, 어느 다큐멘터리에서 본 중국의 농민공이나 북한의 꽃제비들도 떠올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보면 빈곤이란 것이 꼭 먼 나라의 문제가 아니다.

매일 아침 거리에서 보게 되는 ‘어느 핏발 서린 리어카꾼’의 문제고, 홍익대 청소 노동자들과나 쌍용차 해고자들의 문제다. 심지어 매년 지갑 속에 얼마가 남았는지 고민하며 뒤풀이 자리를 망설이는 나의 문제일 수도 있다. 이렇듯 빈곤은 우리에게 먼 것 같으면서도 가깝고 현실적인 문제다.

그런데 오늘날 빈곤 문제를 다루는 관점은 대개 일면적이기 일쑤다.

크게 두 가지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제3세계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다. 이런 접근은 물론 장점이 있다. 이들은 부패 정부, 다국적 기업, 제국주의 국가 들의 야만성을 날카롭게 폭로하고 분석해 제3세계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환기하는 중요한 구실을 했다.

하지만 좀더 포괄적이고 근본적인 접근이 아쉽다. 이들은 흔히 빈곤 문제를 특정 지역으로 국한한다. 대표적인 빈곤 관련 서적들을 살펴봐도 알 수 있다.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장 지글러), <<물에 빠진 아이 구하기>>(피터 싱어), <<세계의 빈곤, 누구의 책임인가?>>(제레미 시브룩), <<빈곤의 종말>>(제프리 삭스) 등의 저명한 책 대부분이 빈곤 문제를 제3세계의 문제로만 취급하



서울 시내 한복판인 상도동에서 강제철거로 집을 잃은 사람들 어떻게 빈곤이 제3세계만의 문제일 수 있겠는가.

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빈곤 문제를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곳에서 멀리 옮겨 주는 ‘편안함’의 부작용은 적지 않다. 특히 일부 보수적 학자들의 저작은 마르크스주의 학자인 데이비드 하비가 지적하듯, 국제지원을 대리해 주는 NGO의 활동을 적당히 지지하면서 빈곤 문제를 제3세계만의 문제로 각인 시켜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주요 산업 국가에서도 ‘워킹푸어’라는 이름으로 나타나는 빈곤 문제를 다루는 이들이 있다. <<가난뱅이의 역습>>(마츠모토 하지메), <<워킹 푸어, 빈곤의 경계에서 말하다>>(데이비드 K 쉬플러), <<워킹 푸어, 열심히 일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시대>>(가도쿠라 다카시) 등은 제3세계가 아닌 나라들, 심지어 신진국에서도 빈곤 문제가 존재한다는 당

연한 현실을 폭로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하지만 이 분석들은 ‘기성세대 책임론’ 등으로 빠지면서 빈곤의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체제의 동학

빈곤에 대한 이런 접근들이 각각 제시하는 해결 방안들을 보면 그 약점이 더 확연해진다. 폭로의 구체성에 견줘 다소 빈약해 보이는 대안에 고개를 가우뚱하게 되는 것이다. 윤리적 기부(피터 싱어), 진정한 인간성 회복을 통한 전 지구적 연대(장 지글러), 빈국에 대한 집중적 원조(제프리 삭스), 체제 밖으로 탈주(마츠모토 하지메), 계급적 투표(데이비드 K 쉬플러), 정부 주도의 정책 개선(가도쿠라 다카시) 등이 그 사례다.

물론 이렇게 몇 단어로 그들이 제시하

는 대안을 정리한다는 것은 다소 무례하고 무리한 일일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몇 마디를 덧붙인다고 빈곤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줄어들지는 않는다. 실제로 유엔이나 G20 등이 제시해 온 기부·원조·정책 지원 등은 전 세계적인 빈곤 문제를 조금도 해결해 오지 못한 것이 사실 아닌가. 이는 보수적인 학자건 진보적인 학자건 모두 인정하는 부분이다.

제3세계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빈곤 문제가 분명 양적·질적으로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이는 자본주의 체제의 동학이 만들어 낸 결과라는 점에서 공통적이다.

미국이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에 1천2백조 원 이상을 쓰고 이명박이 4대강 삼정를 위해 수십조 원을 쓰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빈곤으로 고통받는 것

은 자본주의가 생산수단과 권력을 소유하는 소수와 그렇지 않은 다수로 분리된 체제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세계 최고 부자 세 명의 재산이 가난한 48개국의 부와 맞먹는, 상상하기 힘든 불평등을 낳는다. 다시 말해, 빈곤의 구조적 원인은 자본주의의 논리 자체에 내재해 있다. 사실 이것은 위에서 언급한 책들이 폭로한 사실을 포괄적으로 분석하면 쉽게 이를 수 있는 결론이다.

따라서 자선과 기부 등으로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물론 탐욕스런 기업주들과 권력자들에 대면 이런 실천은 너무나 훌륭한 것이다. 그러나 이런 대안은 빈곤 문제를 발생시키는 자본주의의 고유의 결함을 건드리지는 않는다. 따라서 빈곤을 완화하기도 어렵고 오히려 문제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 빈곤의 뿌리에 도전하는 운동에 적대적인 보수 언론과 지배자들도 자선·기부 등은 찬양하지 않는다.

결국 빈곤을 해결하려면 부를 재분배하는 급진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적 실천이 아니라 집단적 투쟁이 필요하다. 실제로 지금 아랍을 뒤흔드는 혁명은 지금까지 어떤 원조나 지원, 정책 개선보다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더 나은 방안을 보여 줄 것이다.

물론 가만히 앉아서 아랍 혁명의 불기운만 지켜보자는 것은 아니다. 바로 지금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투쟁과 비정규직 차별에 맞서는 투쟁에 지지를 보내고, 대학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투쟁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기업주·부자에게 세금을 부과해서 빈곤을 해결하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그리고 그런 투쟁을 생산수단을 독점한 소수의 권력에 도전하는 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울산 효성 연대 파업 10년

독립적 계급정치와 단결 투쟁의 필요성을 곱씹어야

10년 전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대표적 투쟁을 앞장서 이끌다가 쓰러린 패배를 당했던 효성 노동자들 일부가 최근 새롭게 민주노조를 설립했다.

“2001년 파업 패배 이후 10년간 죽어 지냈습니다. 하지만 해도 해도 너무한 사측을 보며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조 설립신고를 하고 나니 만감이 교차하고 들뜨네요.” 황태윤 지회장은 10년 전 파업의 기억을 잊지 않고 있었다.

효성 노동자들이 강력한 파업을 벌인 2001년은 경제 위기 속에서 곳곳에서 구조조정 사태가 이어지던 때였다. 당시 정부와 재계는 IMF 위기 고통전가의 연장에서 노동자들에게 빼앗긴 고통을 강요했다. 김대중 정부가 약속한 개혁은 완전히 누더기가 됐고 지배계급 내부의 갈등도 깊어져 정부의 정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했다.

기름

2001년 5월 28일, 효성 노동자들은 사측의 대량해고에 맞서 13년 ‘무쟁의’를 깨고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사측은 가스총·전기봉으로 무장한 용역강패를 투입해 노동자들을 위협했지만, 그것은 불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다.

바로 한 달 전에 맨몸으로 저항하던 대우차 노동자들에게 몽둥이 세례를 퍼부은 김대중 정부는 효성 노동자들에게도 경찰 병력 4천여 명을 투입해 무자비한



1987년 이후 최대 규모의 가두시위가 벌어진 2001년 6월의 울산

폭력을 휘둘렀다.

6월 5일, 울산지역을 중심으로 경찰 투입에 항의하는 시위가 시작됐다. 효성에 이어 태광·교합 노동자들이 파업에 가세하면서 이 투쟁은 전국적 초점을 형성했다. 현대차 노동자들도 자발적으로 잔업을 거부하고 가두 투쟁에 나서는 등 연대가 확산됐다. 울산 시내에선 노동자 1만여 명이 모여 1987년 이후 최대 규모 가두시위를 매일같이 벌였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김대중 정권 퇴진’ 구호를 내걸었고, 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효성 투쟁은 총노동과 총자본의 싸움”이라며 연대 투쟁을 호소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지도부는 진지하게

대중파업을 조직하지 않았다. 정부의 위기를 활용해 강력한 싸움에 나설 기회였는데 말이다. 지도부가 투쟁을 연기하고 김대중 정부와 타협을 타진하는 동안, 투쟁 규모는 점점 작아졌다. 냉전 우파에 맞서 남북 대화를 추진하는 김대중 정부를 몰아세우지 말고 대화해야 한다는 논리로 작용했다.

특히 현대차 노조 이상옥 집행부는 사측에게 임금 인상을 약속받고는 연대 파업 전선에서 이탈해 버렸다. 효성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고 투쟁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상옥 집행부가 당시 대표적인 좌파 노조 지도부였기에 실망감은 더욱 컸다.

그러는 동안 지배자들은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적 이기주의를 중단하라”며 비난을 퍼붓고 강경 대응을 지속했다.

결국 1백13일이나 지속된 효성 파업은 끝내 성과를 내지 못하고 좌절을 겪었다.

사측은 파업이 끝나자마자 대량 징계와 해고를 밀어붙였고, 노조 대의원대회에 개입해 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했다. 친사측 우파 노조 집행부는 사측의 탄압과 구조조정을 묵인·방조·합의했다. ‘숨막히는’ 공장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고통을 겪었고, 노동자 두 명이 자살하는 비극도 벌어졌다.

“회사는 수년 동안 비정규직을 늘리고 공장의 개별 라인을 도급화했습니다. 연양 공장에서만 2001년 4백50명이었던 정규직이 3백30명으로 줄었습니다. 10년 동안 임금도 거의 동결됐습니다.”

이런 노동자의 희생 속에서 사측은 엄청난 이윤을 챙겼다. 사장 조현준은 회사 돈을 빼돌려 미국에 호화스런 주택을 네 채나 구입하는 등 횡령도 서슴지 않았다.

이 때문에 노동자들의 불만도 차곡차곡 쌓여 왔다.

“요즘 출근 홍보전 때 노조 소식지를 받아가는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수고한다’, ‘고생 많제’ 하며 인사를 건네는 동료들을 보면 몽글합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우리와 같이 하겠다고 말합니다.”

“2001년에 파업을 이끌었던 박현정

위원장이 올해 2월에 사망했습니다. 그 동지와 함께 품었던 꿈을 이제 하나 하나 만들어 갈 것입니다.”

황태윤 지회장은 노조를 설립하자마자 2개월 정직을 당하는 등 탄압에 직면했지만, “10년 만에 다시 세운 민주노조 깃발을 다시는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면 대결

2001년 효성·태광 연대 파업은 다시금 경제 위기 고통전가가 전개되는 오늘날 우리에게 빼아픈 교훈을 던지고 있다.

김대중 정부에 맞선 정면 대결을 회피하고 대화·협상을 앞세워 투쟁을 외면했던 민주노총 지도부의 대응은 고통전가를 막아내지 못했다. 보수 우파에 맞서 개혁 정부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도 투쟁의 걸림돌이 됐다.

현대차 조합원들의 임금 인상에만 만족해 부문의 담벼락 안에 안주한 현대차 노조 지도부의 협소한 태도는 전국적으로 이어진 구조조정, 비정규직화, 고용불안 심화를 막지 못했다. 이상옥 집행부의 그 같은 태도는 좌파 노조 지도부에만 의존해서는 투쟁이 전진하기 힘들다는 점도 보여 줬다.

10년 전의 쓰러린 기억을 교훈삼아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노동자들의 독립성을 지키며 정치적으로 대응하고, 부문을 뛰어넘는 단결과 투쟁을 건설해야 한다.

김기선

쿠바 사회가 직면한 위기와 모순

2011년 4월 쿠바 공산당은 쿠바를 시장에 개방하는 내용의 개혁안을 통과시켰다. **마이크 곤살레스**는 이런 변화를 낳은 쿠바의 모순을 분석한다. 마이크 곤살레스는 《체게바라와 쿠바 혁명》(책갈피)의 저자다.

2011년 4월 쿠바 공산당은 당대회를 열었다. 이것은 1997년 이후 최초의 전당대회이자 피델 카스트로가 의장 구실을 하지 않은 최초의 전당대회이기도 하다. 카스트로는 공산당 총서기이자 국가 평의회 의장이자 군 최고 통수권자였다. 4년 전 카스트로는 이 권한을 자기 동생인 라울 카스트로 — 피델 카스트로보다 다섯 살 어리고 1959년 혁명 때부터 국방부 장관이었다 — 에게 넘겼다.

사회주의자라면 형에서 동생으로 권력을 이양한 것이나, 이들이 50년 동안 혁명을 절대적으로 통제해 온 것에 우려를 표할 수밖에 없다. 청년 지도자들이 등장해, 이들이 잠시나마 최고 지도자들의 지위를 계승할 것처럼 보인 때도 있었다. 외부부의 로베르토 로바이나나 경제부의 카를로스 라르고가 대표적 사례였다. 그러나 이들은 지도부의 결정으로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졌다.

형식적인 투표를 빼면, 새로운 지도부가 성장할 기회를 주거나, 현 정권이 정말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는지 판단하려는 진정으로 민주적인 선거는 단 한 번도 당 조직 내에서 실시된 적이 없다.

물론, 라틴아메리카에서 피델 카스트로는 역사적 반제국주의 투쟁을 이끈 투사로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의 개인적 인기는 높다.

그러나 그에 대한 숭배(그만이 숭배 대상이다)와 제국주의에 대한 형식화된 비난은 큰 한계가 있다. 그것이 자기해방에 근거를 둔 사회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진정한 대중적 정치 토론과 논쟁, 진정한 선거나 대안적 정치 관점을 제기할 실질적 기회 등을 대신할 수는 없다.

숭배

지난달 전당대회에는 대표 1천 명이 참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미리 정해진 후보들 명단을 놓고 당내 기관들에서 실시된 선거들을 통해 뽑혔다. 2010년 베네수엘라 대통령 우고 차베스가 쿠바를 방문했을 때, 그는 2011년 전당대회에서 통과될 결의문과 결정들을 미리 볼 수 있었다. 심지어 내부 토론 과정도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말이다.

지난달 말 연설에서 라울 카스트로는 이번 전당대회의 목표가 “쿠바 사회주의를 지속 가능하고 역진이 불가능하게 만들려면 경제 운영 방식의 전략적 변화를 시급히 도입해야 하는 현 실정에 비추어… 쿠바 경제 모델을 완벽하게 만드는 데 있다”고 말했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 — 이 중 상당수는 이미 적용 중이었다 — 에는 경제를 외국 자본에 개방하기, 국유 부문 일자리 50만 개 삭감, 대다수 쿠바인들이 생계를 유지하려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생필품에 대한 보조금 지급 중단 — 쿠바 월 평균 임금은 20달러 밖에 안 된다 —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계획을 보면, 국유 부문에서 일하다 실업자가 된 사람들은 민간 부문으로 유입될 것이고 민간 부문의 규모는 계속 커질 것이다. 독자적 경제 활동이 허용될 것이고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대규모 토지를 사유재산으로 획득하는 것도 허용될 것이고 일부 국유자산은 개인에게 매각될 것이다. 29만 5천 명이 이미 민간 부문에서 일하고 있다. 이런 사람들의 수는 늘어날 것이다. 한 연구를 보면, 민간 부문이 이미 전체 경제의 6분의 1에 이른다.



쿠바 공산당 전당대회에서 인터내셔널가를 부르고 있는 피델 카스트로(좌)와 라울 카스트로(가운데) 이들이 추구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모델은 강력한 정치 통제와 경제 자유화가 결합된 중국 모델이다.

평범한 쿠바인들에게는 매일매일 삶이 힘겨운 투쟁이다. 페소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 — 관광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 은 입에 풀칠을 하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쿠바가 시설가 레오폴도 파두라 푸엔테스는 그 결과로 도둑질과 부패가 쿠바 곳곳에 스며들게 됐다고 말한다.

쿠바 농업 정책은 비효율적이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쿠바는 많은 식량을 수입한다. 쿠바가 대대로 의존해 온 사탕수수 산업은 가격 폭락과 토양 오염으로 몰락 직전이다.

대다수 쿠바인들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광범한 부패의 수혜자인 국가의 소수 특권층, 미국에서 송금되는 돈을 받는 사람들, 관광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달러화 상점과 쇼핑몰에서 ‘쇼핑’(언제나 영어로 표현된다)에 탐닉한다.

2011년에 한 연설을 마치면서 라울 카스트로는 다음과 같은 잔혹한 대안을 제시했다. “우리가 잘못을 고치지 못하면 우리는 망할 것이다.” 2005년 피델 카스트로는 혹독한 조처를 실행하지 않으면 부패 때문에 혁명이 내부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1986년 [반부패] 정화 캠페인을 시작하면서 라울 카스트로는 똑같은 말을 한 바 있다.

그러나 부패는 소수의 정치 관료들이 나라를 통제하는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들은 1959년 풀헨시오 바티스타 정부를 전복시킨 뒤부터 근본적으로 변한 것이 없다. 1959년 쿠바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아니라 반식민지 혁명이었다. 대다수 쿠바 노동자들은 이 혁명에 공감했지만 방관자의 위치에 있었다. 오늘날 평범

한 쿠바인들은 이 소수의 특권 집단과 하루하루 삶이 전쟁인 대다수 사람들 사이의 갈수록 커지는 격차에 분노를 토한다.

물론 이런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반복되는 반론이 있다. 쿠바가 1959년부터 큰 어려움 — 많은 부분 쿠바 혁명을 파괴하려는 미국 정부의 끝없는 노력이 초래했거나 그것 때문에 증폭된 — 을 겪어왔지만, 교육과 의료를 중심으로 모든 쿠바인이 생활수준을 높은 중요한 사회적 개혁이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라울 카스트로가 발표한 조처들 속에는 노동자가 고등교육을 받는 것을 돕는 보조금과 장학금 삭감이 포함돼 있었다. 노동자들은 여전히 고등교육 기관에 입학할 수 있지만, 이제는 교육비를 알아서 내야 한다.

다른 나라로 파견된 쿠바 의료진에 관해 얘기가 많다. 예컨대, 베네수엘라의 바리오 아덴트로스는 쿠바 의료진 2만 명을 고용했고 젊은 베네수엘라 의사들이 쿠바에서 훈련받고 있다.

아쉽게도, 이것은 단순한 국제 연대 사례가 아니다. 쿠바 의료진과 교육자들은 쿠바의 중요한 수출품이다. 베네수엘라의 경우, 쿠바는 의료진을 보내는 대신 석유를 받는다. 아마 이것이 20세기 말 쿠바가 힘들었을 때 쿠바 경제를 구했을 것이다. 그러나 덕분에 쿠바 의료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있고 교사도 부족한 실정이다. 외국으로 나가지 않은 사람들(의국에 나가면 달러로 보수를 받는다)은 관광산업에 진출해서 택시를 몰거나, 관광 안내원을 하거나, 심지어는 성매매를 하면서 달러를 벌려고 한다.

쿠바 경제의 위기는 1990년대 초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거의 30년 동

안 쿠바 경제를 지탱해 준 소련의 지원이 갑작스레 끊겼다. 1990년대 말에 관광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쿠바 경제도 성장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성장은 쿠바 경제의 근본적 전환과는 상관없는 것이었기에 기반이 취약한 성장이었다.

비록 오바마 정부 들어 약간 숨통을 트워 주긴 했지만, 역대 미국 정부가 지속해 온 범죄에 가까운 경제 제재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 세계적 불황, 태풍 피해, 사탕수수과 니켈 가격 폭락이 결합돼 쿠바의 위기는 깊어지고 있다. 게다가, 2008~2009년 동안 관광산업은 큰 타격을 받았다. 그 뒤로 회복됐지만 수입은 기대보다 느리게 늘고 있다.

소수 특권층

이 모든 상황이 결합돼 사무엘 파버가 “사회적 쇠퇴”라고 부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즉, 대다수 쿠바인들은 열악한 삶을 산다. 그러나 고급차를 몰고 아바나의 말레콘을 유유히 가로지르는 소수 특권층도 있다. 대다수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야 콩나물 버스를 타고 집에 간신히 갈 수 있는데 말이다.

또, 최근 외국계 회사들에서는 자신들도 국가와 경제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것을 조금이라고 얻고 싶은 심정에 임금을 페소가 아니라 달러로 지불해 달라고 요구하는 저항들이 일어났다. 이렇게 심각한 소외 현상은 《더러운 아바나》 3부작을 쓴 페드로 후안 구티에레스나 〈코모 비비레〉(어떻게 살라고)를 부른 페드로 루이스 페레즈 등 쿠바 문화인들의 단골 소재가 됐다.

쿠바에서 오랫동안 보기 힘들었던 이런 저항의 몸짓과 시위는 지난 2~3년 동안 더 빈번하게 발생했다. 그래서 힙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전국 대학들에서 집회가 열렸다.

라울 카스트로는 사회주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故) 켈리아 아트(1959년 혁명을 이끈 ‘7월 26일 운동’ 창립자의 딸)가 과감하고 용기있게 지적했듯이 “사회주의가 다른 사회체제와 다른 점은 부가 약간 더 공정하게 분배되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가 자신을 생산수단의 작동자로, 운영자로, 소유자로 인식하는 새로운 의식과 함께 새로운 생산관계가 나타나야 한다.”

사실, 쿠바의 현실은 아르트가 말한 것과 거리가 멀다. 부의 분배는 갈수록 불공평해지고 있고, 그가 말한 노동계급이 통제하는 직접 민주주의와 눈급만큼도 닮지 않았다. 2010년 발표한 일련의 글들에서 기예르모 알메이라나는 당대회에 제출된 많은 양의 문서들이 노조나 민중권력 기관에 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은 것을 지적했다. 오히려, 이제 당과 국가가 공식 통합될 것이다. 국가기구에서 독립된 정치 영역의 존재 자체가 사라지게 됐다. 물론, 이 통합은 이미 존재한 것을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일 뿐이다. 만약 공산당 외부에 아무런 정치조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실제로 허용되지 않는다), 실질적인 민중권력이 행사되고, 비판적 토론이 벌어지고, 권력이 도전받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는가?

쿠바에 이런 것이 존재하는가? 라울 카스트로는 무슨 의미로 “쿠바 사회주의를 지속 가능하고 역진 불가능하게 만들자”고 말한 것인가?

이번 전당대회가 완전히 새로운 전략을 추진하려고 조립된 것은 분명하다. 경제는 자유화될 것이고, 쿠바 경제는 느리지만 분명히 세계경제에서 제 위치를 찾으려 할 것이다. 정말 아이러니한 것은, 50년 동안 진행된 쿠바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해 달라는 요구가 미국 중서부 식량 생산업자들에게서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성장하는 쿠바 시장에 접근하고 싶어한다. 또, 전당대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조처들이 도입되면, 쿠바 인구의 20퍼센트가 민간 부문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지금 쿠바에서 생산된 물품들은 국가를 통해 판매된다. 이것은 쿠바 국가 관료를 강화하고 그들이 더 많은 부패 행위를 저지를 기회를 제공했다. 그러나 ‘신생’ 민간 기업인들의 대다수는 바로 그 관료들의 가족과 친구 들일 것이다. 사실, 지난 15~20년 동안 이 과정이 이미 진행돼 왔다.

라울 카스트로가 추구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모델’은 사실 강력한 정치 통제와 경제 자유화가 결합된 중국 모델이다. 이런 모델은 당연히 민간과 국가의 자본가들에게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다. 말로는 노동자들의 이름 아래 이런 정책을 진행한다고 하겠지만 실제로는 노동

» 13면으로 이어짐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구걸하는 여인

민주노조를 쟁취한 전주 버스 노동자의 편지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1백45일간의 처절한 파업 투쟁을 마무리하고 현장에 복귀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참아낸 동료들이 고맙고 매우 자랑스럽다.

제일여객의 파업 대오는 1백62명으로 시작해서 끝날 때는 1백42명이었다. 어려운 가정 형편에 비취 보면 상상을 초월하는 응집력과 인내를 보여 준 것이다. 이것은 승리에 대한 믿음과 파업의 정당성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20명이 경제적 타격에 굴복해 파업 대오에서 이탈했지만 그들도 파업의 정당성을 부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같이 파업했던 동료들에게 미안해 낮을 들지 못하고 괴로웠다고 한다. 우리가 파업을 마무리하고 복귀했을 때 그들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왔다.

일부 조합원들은 투쟁을 통해 이론 성과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투쟁 과정에서 과거의 굴종적인 의식과 비교할 수 없는 당당함을 얻는 등 의식의 변화를 겪었다. 무엇보다 끔찍한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교두보를 얻었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과거 한국노총 소속 전 노동조합은 도저히 용납하기 힘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무관심했다. 그런 노조를 등에 업고 회사는 착취에



사진 제공: 공공운수노조(왼)

1백 일 넘는 투쟁 끝에 승리한 버스 노동자들 자신감과 향후 투쟁의 교두보를 얻었다.

열을 올렸다. 그야말로 노예나 다름없고, 파리 목숨과 같은 생활을 해 왔다.

민주노조를 인정받은 지금, 어용노조를 탈피했다는 성취감을 빼면 현실은 여전히 끔찍하다. 조합원들은 부당배차, 부당 승무, 열악한 노동조건 등을 확 뜯어고치길 원하고 있다. 우리는 투쟁을 통해 얼마든지 이런 현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행정관청이나 사측도 과거처럼 노동자를 무시하지 못할 것이다. 무시한다면 우리가 그저 두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민주노조를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서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가칭 ‘국민노조’라는 것이 생겨나고 있다.

우리 노조에서도 투쟁 없이 노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는데 불필요하게 힘들게

싸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과연 ‘국민 노조’가 대안일까. 투쟁하지 않고서 어느 것 하나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 전북버스 노동자들은 확실히 경험했던 게 아닌가.

이제부터 전주 민주버스 조합원들은 새로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전북고속 동지들의 끝나지 않은 파업 투쟁에 힘을 실어서 전북고속 사업주를 굴복시켜야 한다. 동시에 복귀한 각 작업장에서 그동안 포기해야 했던 권리 찾기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리 투쟁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전국의 노동자들의 요구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우리의 민주노조 건설 투쟁이 전국을 뒤흔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최병운 전주 제일여객 쟁의대책위원장

학생 인권 조례는 ‘교권’ 침해가 아니다

최근 서울에서도 학생 인권조례 주민 발의가 성사됐다. 팍팍하고 억압적인 학교 분위기를 완화할 가능성을 어느 정도 열어 놨다는 점에서 인권조례 발의를 두 손 들고 환영한다.

그런데 조종동 같은 대표적 우익 신문들은 인권 조례가 마치 선생님들의 권리인 교권과 배치되는 양 주장한다. 이들은 체벌 금지 조처 이후 교사들의 권위가 하락하고, 학교에서 고통받는다면 자신들이 마치 교사의 권리를 옹호하는 양 역겨운 소리를 하고 있다.

조종동과 지배자들이 원하는 비인간적인 교육을 하도록 강요받고 있는 선생님들도 체벌을 금지한 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는 푸념을 하곤 한다.

그러나 이런 주장들은 교권을 협소하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교권은 선생님의 권리다. 선생님은 단순히 지식뿐 아니라 사회와 인생까지도 가르치는 존재다. 그런데 현실에서 중립

적인 것은 없기 때문에 선생님들은 자신이 가르치는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을 가지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진정한 교권은 가르치는 행위를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넘어서 자신이 가르칠 것을 결정할 권리, 자신의 주관에 따라 부당한 것을 가르치지 않을 권리, 학교의 주인으로서 당당하게 학교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입시제도와 같은 거대한 교육 통제를 거부할 권리,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진정한 교권

따라서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선생님 중 누가 학생들이 무기력하게 고개 숙여 자는 수업을 하고 싶겠으며 학생들 역시 그러한 수업을 듣고 싶겠는가? 체제의 압력이 없다면 어떤 선생님인들 학생들을 체벌로 다스리고 싶겠으며 학생들 역시 자신을 때리는 선생님을 마주하고 싶겠는가?

선생님 중 누가 자신의 신념이 아닌 것을 가르치고 싶겠으며 학생들 역시 선생님이 진심으로 믿지 못하는 것을 배우고 싶어 하겠는가? 선생님 중 누가 진도 압박으로 경쟁 교육의 바닥에 있는 학생을 버리고 싶겠으며 학생들 역시 선생님에게 버림받고 싶겠는가?

우파 신문과 지배자 들은 진정한 교사의 권리를 원하지 않는다. 일제 고사를 거부한 교사들과 민주노동당원인 교사들을 징계한 사례, 또 자신의 신념에 따라 가르치는 교사들을 통제하려 하는 여러 시도들을 보라!

진보적 교사라면 교권과 인권이 대립한다는 우익들의 선동에 동조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에서 가르칠 내용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진정한 교권을 위해 투쟁해야 한다.

박태현 전교조 교사

※ 이 편지는 이인범 교사의 독자편지를 지지하는 글이다.

자본주의 비판을 다룬 내 수업이 문제인가

나는 2011학년도 1학기 3~4월 두 달 동안 고등학교 3학년 심화영어 독해 정규수업시간에 ‘Criticism of Capitalism(자본주의 비판)’을 자료로 수업을 했다. 이 자료는 위키피디아에서 긁어 온 것이라 인터넷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접할 수 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학부모가 학생들에게 사상교육을 한다고 교육청에 신고를 해, 더는 그 수업을 할 수 없게 됐다.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을 교육의 주제로 삼지 못하는 교육 현실, 참담하다. 교육의 목적은 기능적 인간을 만드는 것에 있지 않다. 인간 개개인이 개인과 사회의 행복을 위해 살 수 있는 소양을 쌓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한다.

현재 한국은 절대 자본주의, 즉 경쟁과 승자독식을 특징으로 하는 신자유주의 물결의 한 가운데에 있다. 과도한 경쟁 속에서 한국 청소년 자살률은 세계 1위다. 올 들어 카이스트 학생 네 명이 자살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나는 학생들이 공부하는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계는 생각할 틈이 없고 행복할 틈이 없다. 소질과 적성이 학업과 맞는 학생은 대학에 가서 계속 공부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모든 학생들이 학업을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수능에서 아무리 좋은 점수를 얻어도, 삶에 대한 의미를 찾을 수 없다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없다. 나는 학생들의 행복을 원할 뿐이다.

학교가 학원화가 돼 가는 것이 너무 속상하다. 사회의 실체를 알지 못한 채, 맹목적으로 경쟁에서 이기기만을 강요받는 학생들의 현실이 안타깝다.

‘자본주의 비판’을 교재로 선택한 이유도 같은 맥락이다. 자본주의는 ‘돈’이 중심이 된 사회다. 돈이 있으면 행

복하고 없으면 불행하다고 여긴다. 물론 돈은 살기 위해 필요한 만큼은 있어야 하기에 중요한 것이기도 하다. 하지만 돈, 즉 부를 많이 쌓기 위해, 나만 편하게 살기 위해, 좋은 학벌이 필요해서 학생들이 입시에 매달리는 것에는 반대한다.

현재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노동자 투쟁에서 볼 수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는 ‘사람’보다 ‘돈’을 우선하기에 발생한다. 인간이 소외받는 사회의 모습이다.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사회를 당연시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맹목적 경쟁 반대

두 달 동안 영어교사로서 매우 행복했다. 영어시험 잘 치르는 방법만을 가르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의 의미를 학생들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3월 수업 첫 시간에 진도를 나가지 않고 학생인권 등을 언급하며 우리 아이들이 처한 교육현실에 대해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학부모의 항의가 있었고 관리자부터 문책을 받았다.

내 생각에 ‘학생인권 조례제정 청구인 명부’에 서명하지 않은 교사는 교육자의 자격이 없다. 학생도 엄연한 하나의 인격체다. 학생은 통제와 단속의 대상이 아니다. 학생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정말 의미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학생들은 졸업 후 대다수가 노동자가 된다. 경쟁과 착취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끊임없는 자기 성찰, 자기 실천과 연대를 강화해 나갔으면 한다.

이인범 교사

빈 라덴 사망이 미국의 자신감을 키울까?

〈레프트21〉 56호 기사 ‘빈 라덴을 죽이고 기뻐하는 전쟁광·위선자들’에서 “빈 라덴이 죽었다 해서 세상이 더 안전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자신감을 얻은 미국 정부가 더 많은 전쟁을 벌이면서 자신의 국제적 위상을 더 강화하려 할 수 있다”는 부분에 이견이 있다.

중동전쟁의 지지부진함, 북아프리카와 중동의 민중혁명, 무엇보다 경제 위기로 인해 패권에 큰 타격을 입은 미국 지배계급이 빈 라덴의 죽음을 통해 얼마나 자신감을 얻으려는 좀더 장기적인 관점으로 지켜봐야 한다.

빈 라덴의 죽음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미국 주도의 질서에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말의 공포심을 유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르지만, 오직 미국만이 세계 안보를 보장할 수 있다고 일갈하고픈 오바마의 바람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얼마 되지 않을 것이다.

많은 평범한 미국인들 — 이들은 새로운 전쟁에 투입될 사람이기도 하다 — 에게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 유지를 위해서 더 많은 전쟁을 수행해야 마땅하다는 공감대를 얻는 것도 단기적으로는 힘들어 보인다.

김기철

》 12면에서 이어짐

자들을 희생시킬 것이다.

이런 주장은 추상적이거나 학술적인 것이 아니다. 이것은 쿠바의 경제적 생존을 위해 희생할 것을 요구받는 쿠바 노동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적 전략에 관련된 것이다. 쿠바 노동자들은 쿠바 국가가 강요하는 잔인한 정책에 맞서 어떻게 자기 이해관계를 보호하고 대응할 것인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

먼저, 사회주의자들은 오랫동안 쿠바에 고통을 가져다 준 제국주의 경제 봉쇄를 폭로하고 비판해야 한다. 오바마 정부를 포함한 역대 모든 미국 정부가 카스트로의 쿠바를 포위·봉쇄한 것은 심각한

고 포괄적인 피해를 낳았다.

다른 한편, 사회주의자들은 쿠바 국가의 반제국주의 미사여구가 쿠바의 심각한 모순을 감추는 구실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그동안 국제연대의 이름 아래 쿠바 정부나 쿠바 혁명의 한계에 대한 모든 비판은 반혁명적인 것으로, 혹은 미국의 반카스트로 로비 집단에게 이득을 주는 것으로 취급받아 왔다.

그러나 만약 사회주의가 “노동계급의 자기해방”이라면, 쿠바 노동계급이 갈수록 권력에서 소외당하고, 독립적 계급 조직의 결성이 허용되지 않고, 50년 동안 권좌를 지켜 왔고 이제 새로운 조처들을 도입하려는 쿠바 지배계급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도 쿠바가 여전히 사회주의라고 주장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쿠바에서 실제로 사회주의의 불꽃을 지피는 사람은 사회적 불평등에 저항하는 사람이자, 라울 카스트로 정권 아래 갈수록 심각해지는 비판적 목소리에 대한 역할을 폭로하는 사람이다. 피델 카스트로는 자기 형제의 정권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지만, 그는 고비 때마다 자기 형제의 정권을 옹호해 왔다.

피델 카스트로, 우고 차베스, 니카라과의 다니엘 오르테가가 리비아의 카다피를 옹호한 것을 보고 전 세계 사회주의자와 활동가 들은 곤혹스러움과 우려를 느꼈다. 물론, 리비아의 저항세력은 오늘날

쿠바의 저항운동처럼 그 정치적 성격이 불명확하고 다양하고 때로는 모순적이다. 거의 50년 동안 두 나라 모두 정치적 비판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웠고, 독립된 정치 활동을 조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에 명확한 혁명적 사회주의 전통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혁명이라는 학교”는 그런 운동이 자랄 수 있는 최고의 토양을 제공한다. 카다피에 대해 피델 카스트로가 모순적 태도를 취하는 것은, 그가 1959년 혁명 이래로 정권과 쿠바민중을 연결해 온 반제국주의적 시각을 버리기 꺼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쿠바 국가가 독점권을 주장해 온 민중권력을 현재의 중동과 북아프리

카 민중처럼 자신의 집단적 힘을 발견하기 시작한 쿠바 노동계급이 되찾으려 노력하고, 자본주의 그 자체를 자신의 이익을 해치는 적으로 인식한다면, 그만큼 쿠바 혁명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쉘리아 아르트가 지적했듯이, “굶주림, 위협, 봉쇄, 미국 해군과 핵미사일이 무너뜨리지 못한 것이 이제 우리 자신의 모순 때문에 무너지려 하고 있다. 최초로 인간의 행동이 시장을 극복할 수 있게 됐다. 그것이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시장의 노예가 되기를 거부하고 그것을 우리의 (집단적) 통제 아래 두는 것 말이다.”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김용욱

영화평

〈레즈〉(선호빈 감독, 77분)

‘작은 거인들’의 투쟁과 승리의 기록



2006년 4월 19일 고려대에서 학생 일곱 명(강영만, 서법진, 주병준, 안형우, 김지윤, 오진호, 조정식)이 쫓겨났다. 고려대 당국이 병설보건대를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보건대 학생들을 차별하는 데 항의하는 시위를 벌인 ‘본교’ 학생들이었다. 시위 도중 17시간 동안 보직교수 아홉 명을 ‘감금’하는 ‘패륜’ 행위를 주도했다는 것이 출교의 이유였다.

출교 당한 학생 일곱 명은 본관 앞에 천막을 세우고 징계 철회 투쟁을 벌였다. 2008년 3월까지 무려 7백여 일 동안 계속된 이 투쟁은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과 학생운동 탄압에 맞선 대표적 투쟁이었다.

지난 3월 말 열한 번째 열린 인디다큐페스티발에서 이들의 투쟁을 다룬 영화가 상영됐다. 고려대 영화 동아리 쿠벨바그 소속 선호빈 감독이 만든 〈레즈 Reds〉다.

〈레즈〉는 출교 사태를 신자유주의적 대학 ‘개혁’의 과정 속에서 그린다.

고려대 당국이 말하는 “수요자(기업) 니즈(필요)에 맞는” 교육과 “글로벌 고대” 속에서 학생들의 권리는 철저히 배제됐다. 경쟁 강화로 학생들은 피가 마르는 고통을 느꼈고 학문은 기업의 필요에 종속돼 갔다.



출교생 7명은 무려 7백 일 동안 초인적 투쟁을 벌였다.

출교된 일곱 명은 이런 변화에 반대하던 학생들이었다. 이 영화는 출교 조처가 이런 학생들에 대한 마녀사냥이었고 무엇보다 2005년 고려대 당국이 삼성이건희에게 명예 철학박사 학위를 수여하는 것에 반대해 학생들이 시위를 벌인데 대한 보복성 징계였다고 말한다.

이 영화의 압권은 당시 학생처장이던 성영신의 인터뷰다. 성영신은 학생들의 시위가 시대착오적인 “원시인”들의 “순수하지 못한 정치 쇼”라고 일갈한다. “학생운동이 왜 살아야 하느냐? 죽어야 할 때가 되면 죽어야 한다”면서 “미성숙한 학생은 미성숙한 대학으로 가라”는 것

이 출교의 의미란다. 한 대학 학생처장의 의식 수준이 어쩌면 이토록 저급할 수 있나 싶다.

이렇게 〈레즈〉는 ‘명문 사학’ 고려대의 이면을 폭로한다. “글로벌 고대”를 외치며 촉배를 드는 전 총장 어윤대의 기름진 얼굴은 지금 봐도 역겹다.

출교생들은 어윤대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 쫓아가 시위했고 무엇보다 7백여 일 동안 본관 앞 천막 농성을 유지했다. 선 감독은 애정 어린 눈으로 천막 농성의 소소한 일상도 카메라에 담았다.

출교생들은 한여름에는 찜통이 되고 한겨울에는 입김이 나는 곳에서 먹고 자

며 여름과 겨울을 두 번씩 보냈다. 위염과 무릎 연골 파열, 허리디스크는 농성 중에 얻은 병이었다. 말하진 못했어도 불투명한 투쟁 전망에서 오는 초조함도 작지 않았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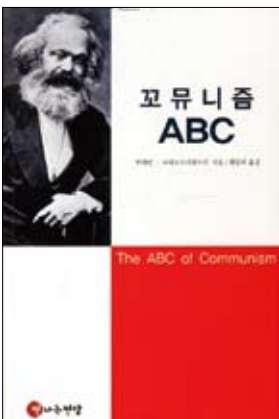
그러나 이들은 이 투쟁이 자신들만의 투쟁이 아니라는 점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 특유의 발랄함과 낙관, 의지력으로 자신을 다잡고 어려움을 극복해, 결국 재판에서 출교 무효 판결을 받아내며 승리했다.

그런 점에서 이 ‘작은 거인들’의 이야기는 기록될 만한 가치가 있고 그래서 이 영화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카메라를 들고 출교생들과 동고동락하며 2년을 찍고, 그 후 3년을 편집해 77분짜리 영상으로 만든 감독의 정성에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현주

〈레즈〉를 볼 수 있는 법

- 선호빈 감독에게 메일을 보내면 영화 파일을 받을 수 있다. sunhobin@gmail.com
- 〈레즈〉블로그를 통해서도 감독과 연락을 할 수 있다. <http://sunhobin.tistory.com>
- 6월 2일 7시 고려대 문과대 202호에서 고려대 영화동아리 ‘쿠벨바그’ 주최로 상영회를 한다.



《꼬뮤니즘 ABC》, 부하린·프레오브라젠스키, 황동하 옮김, 빛나는전망, 1만 원, 2백13쪽

서평



혁명의 힘으로 그린 대안 사회의 모습

“지금 자본주의는 눈 앞에서 사멸하고 있다.” 마르크스주의 입문서로서 이 책이 다른 입문서들과 구분되는 특징은 무엇보다도 발간 시점에 기인한다.

1917년은 열광적인 해였다. 러시아 노동계급은 아만으로 치닫던 제1차세계대전의 동부전선을 무너뜨리며 세계 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성공시켰다.

하지만 겨우 2년 만에 힘겨운 내전이 시작됐다. 러시아의 옛 지배자들과 14개국의 군대가 쳐들어왔다.

이 책의 집필은 내전에서 승리하고 국제 혁명을 전진시키려는 러시아 혁명가들의 수많은 과제들 중 하나였다. 혁명의 성공으로 당원들이 물밀듯 들어왔다. 그들은 새로운 세계관으로 무장돼야 했다.

러시아공산당은 즉각 이 과제에 착수했다. 1919년 3월에 채택된 당 강령을 풀어쓰기로 했고 《공산주의의 ABC》라는 해설서를 이듬해에 발간했다. 이번엔 번역된 이 책은 해설서의 1부에 해당한다.

러시아 혁명이 부하린은 서문에서 이렇게 말한다. “이 책을 집어 든 모든 동지는 그것을 끝까지 읽게 될 것이다.” 정말 그렇다. 쉬운 낱말과 명료한 논리 전개로 가독성이 뛰어난 책이다.

이 책은 기초적이지만 생생한 질문을 던진다.

자본주의가 말하는 ‘조국’은 무엇인가? 이 단어가 지닌 진정한 뜻은 무엇인가?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가? 부가 넘쳐나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극

빈자가 되는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혁명 러시아의 경험과 접목된 사회주의에 대한 심오한 질문도 있다.

어떻게 이 방대한 조직이 아무런 관리 없이 작동될 수 있을까? 누가 사회적 생산을 위한 계획을 작성할 것인가? 누가 노동력을 분배할 것인가? 누가 사회적 소득과 지출을 기록할 것인가? 한마디로 누가 이 모든 일들을 감독할 것인가?

이 책은 그 어떤 책보다도 충만한 자신감을 보여 준다.

저자들은 과감하게 주장한다. 계급 대립에 들어간 방대한 인간 에너지를 해방시켜야 한다고 말이다. “탄압과 법정 재판, 경찰 활동” 같은 낭비된 에너지들은

“경쟁과 공황, 전쟁으로 파괴되거나 낭비되었던 에너지와 물질적 수단”과 함께 사라지고 말 것이다.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 혁명가들의 경험, 알짜배기 자본주의 비판.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얻고 싶다면 이 책을 읽어야 한다. 다음과 같은 공산주의의 미래는 핵재앙, 심대한 경제 위기, 그 밖의 일상적인 아난을 경험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다.

“인간의 인간에 대한 학대가 사라짐과 함께, 인간에 대한 자연의 학대도 마찬가지로 사라질 것이다. 남성과 여성은 처음으로 잔인한 짐승과 같은 삶에서 생각하는 존재의 가치 있는 삶으로 인도될 것이다.”

한수영

위기의 자본주의, 그 대안을 찾는 토론 공간

다함께 공개포럼에 초대합니다!

주최 | 다함께
www.alltogether.or.kr

* 웹사이트에 포럼 일정을
수시로 업데이트합니다.
* 참가비는 장소 대여 등에 사용됩니다.

다함께 서울 동부 공개 포럼

왜 유로존의 위기가 계속될까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5월 25일 (수) 오후 7시 30분

장소: 모임공간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 대강의실 (건대입구역 6번 출구, 광진구 자양4동 13-42호 3층)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447-0397, 010-9910-2021

부산지역 대학 마르크스주의 포럼

국가란 무엇인가

연사: 차승일 (마르크스21) 편집팀원

일시: 5월 24일 (화) 오후 6시

장소: 부산대학교 문창화관 2층 다목적강의실1

참가비: 2천 원

문의: 010-5331-1968

다함께 서울 서부 공개 포럼

자본주의와 해발전 —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대안

연사: 장호중 (레프트21) 기자, 기후정의 활동가

일시: 5월 26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가톨릭 청년회관 CYC 4층 (홍대입구역 2번 출구)

참가비: 3천 원 (학생 2천 원)

문의: 02-324-3400

다함께 경기 남부 공개 포럼

왜 유로존의 위기가 계속될까?

연사: 강동훈 (레프트21) 기자

일시: 6월 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모임전문공간 모토S실 (강남역 8번 출구 20미터 강남제일빌딩 8층)

참가비: 4천 원

문의: 02-416-0963, 010-2401-1987

다함께 서울 중북부 공개 포럼

경쟁 없는 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

연사: 이영주 (전) 전교조 서울시지부 수석부위원장,

신원초등학교 교사, 정진희 (다함께 활동가)

일시: 6월 2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웹사이트 추후 공지

참가비: 2천 원

문의: 070-8113-8541, 010-8033-7822

다함께 경기 남부 공개 포럼

복수노조 시대, 무엇을 할 것인가?

연사: 김승섭 (전)국전노조 경기도 건설지부 대의원)

일시: 6월 16일 (목) 오후 7시 30분

장소: 웹사이트 추후 공지

참가비: 1천 원

문의: 010-6663-0032

다함께 서울지역 연락처

서울 동부지구

연락처: 02-447-0397 atge@paran.com

<http://blog.naver.com/atgeforum>

서울 광진구 중곡4동 93-49 2층

서울 서부지구

연락처: 02-324-3400 west.atg@gmail.com

<http://blog.naver.com/atgwestforum>

서울 마포구 동교동 174-14번지 3층

서울 남부지구

연락처: 02-416-0963 atgsouthmail@jinbo.net

http://blog.naver.com/nambu_forum

서울 송파구 삼전동 7-1 402호

서울 중북부지구

연락처: 070-8113-8541 jballtogether@gmail.com

<http://blog.naver.com/atgjbforum>

서울 종로구 송인2동 201번지 13호

Report@left21.com

소식·보고 면은 작업장과 대학 등의 투쟁 소식을 나누는 장입니다. 5월 30일(월)까지 소식을 보내 주십시오.

현대차 비정규직

대량 보복 징계를 철회하라!

1천5백여 명 징계, 1백4명 해고, 1백87명 고소·고발.

현대차에서 급속노조 역사상 최대 규모의 보복성 징계가 진행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지난해 점거파업을 벌이며 정규직화를 요구했다는 게 그 이유다.

경총 등 지배자들은 “산업현장의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이런 탄압을 정당화하지만, 진정 심판을 받아야 할 자는 바로 현대차 회장 정몽구다.

대법원이 불법파견을 판정한 지 3백 일이 넘었는데도 이 판결을 쓰레기 취급하고 있는 자가 바로 정몽구다. 비정규직 “살처분”에 나선 정몽구야말로 징계하고 구속해야 할 범죄자다.

이명박 정부는 지난 10년간 불법을 저질러 온 정몽구를 기소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정당한 권리를 위해 투쟁한 비정규직 노동자 23명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5명을 수감했다. 검찰은 최근 이들에게 2~3년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규직화 투쟁은 경제 위기와 물가 폭등 속에 신음하는 수많은 노동자들의 설움과 울분을 대변하는 정당한 싸움이었고 정의로운 행동이었다.

현대차는 이미 지난해에만 5조 2천6백70억원의 순이익을 거뒀고 정몽구의 주식 가치는 자그마치 7조 원이 넘는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1년 동안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은 정몽구가 가진 주식 가치의 단 2퍼센트 밖에 안 된다.

지금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용감하게도 탄압에 굴하지 않고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대량 징계가 시작된 전주 공장에선 특근 거부 등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금의 대량 징계 사태는 지난해 급속노조·진보정당 지도부가 민주당을 추수하며 점거파업 해제와 중재에 나선 것이 잘못이었음을 보여 준다.

당시 자신들의 “끊임 없는 중재 노력” 덕분에 교섭이 시작됐다고 자화자찬했던 민주당은 지금의 사태를 나몰라라 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 전주 비정규직지회 강성희 지회장이 최근 울산·아산지회와 별도로 사측과 양보 교섭을 통한 타협을 추진하는 것은 우르스럽다.

강 지회장은 “정규직화할 때까지 투쟁만 하자는 것이냐”고 토로하지만, 오로지 탄압 세례만 퍼붓는 사측에게 교섭하자고 매달려선 답이 안 나온다.

비정규직 3지회가 단결해서 투쟁하며 조직력을 추스르고, 정규직과 연대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박설

외국어대



방한이 장사

1천여 명이 모인 5월 18일 학생총회 이런 힘이 되었을 때 점거 농성에 돌입해야 한다.

비리 총장 퇴진을 위한 학생총회가 성사되다

5월 18일 비리 총장 박철의 퇴진을 요구하는 비상학생총회가 성사됐다.

홍보가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일부 활동가들은 총회 무산을 걱정했지만, 정족수인 8백80명을 넘는 9백29명의 학생들이 노천극장을 메웠다.

이것은 비리 총장에 대한 학생들이 이 분노가 얼마나 큰지 보여 줬다.

총회 당일 오전에 각급 처장과 학장들은 단과대 학생회장들을 따로 불러내 회유하느라 바빴다. 학생처장은 “솔직히 총회가 성사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도 말했다.

그러나 나처럼 일부 학생회장들은 학장과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학교 당국의 방해는 결코 학생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었다.

이날 학생총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건설하고, 이기구를 중심으로 투쟁을 벌이기로 결정했다. 아쉽게도 비대위 인준과 투쟁 계획 건을 다룰 때 정족수가 미달돼서 이후 중앙운영위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로 했다.

따라서 총회 결정에 따라 실질적으로 투쟁을 조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총회 다음 날 열린 비상중앙운영위원회는 별다

른 투쟁 계획을 결정하지 못했다. 유감스럽게도 NL 경향의 좌파 학생회장들도 투쟁에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총장 비리가 폭로된 이후 한 달 넘게 항의 행동을 조직하지 못했던 오류를 반복해선 안 된다.

특히 운동의 전진을 위해선 몇 가지 쟁점에서 태도가 분명해야 한다. 우선, ‘총장 퇴진’ 요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일부 학생들은 총회에서 “대책위 명칭에 총장 퇴진을 내걸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골프장

하지만 나는 ‘비리 총장 퇴진을 위한 대책위원회’로 대책위 명칭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장이 마음대로 사용한 4억 원은 우리 학생들의 피 같은 등록금이다. 그는 4월에 학생들과 만난 자리에서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 돈을 썼다고 뻔뻔스럽게 말했다. “교수들과 이런 데도 다닐 수 있고, 총장인 내가 돈을 안 낼 수도 없다.”

비리 총장 박철은 임기 내내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으로 학교를 운영해 오기도 했다.

분노의 초점은 바로 이런 총장에

게 모여지고 있다. 그래서 중앙운영위가 ‘총장 퇴진’ 요구를 결정했고, 이런 주장에 공감하는 학생들이 총회로 모였던 것이다.

둘째, 강력한 투쟁 전술을 채택해야 한다.

총회에서 이재성 외대발전학생추진위원장은 “우리는 총회 성사에 머물지 말고 행동해야 한다. 가장 확실하게 학교 당국을 압박할 수 있는 것은 점거다” 하고 주장했다. 박수가 터져 나왔다.

그런데 총학생회장은 “모든 것을 비대위에 위임하겠다”며 피해 갔다. “이 자리에서 학우들과 함께 논의해 투쟁을 계획하겠다”고 한 말을 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끌어선 ‘총장 퇴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힘이 있을 때 강력하게 치고 나가야 한다.

활동가들은 학생들을 비대위로 결집시키고, 총장 퇴진을 요구하는 점거 농성을 조직하는 데 나서야 한다.

또 용인캠퍼스 학생들과도 함께 단결해 투쟁해야 한다. 그러려면 확대운영위가 잘못 결정한 — 서울·용인 캠퍼스 학생들 간 차별을 뜻하는 — ‘복수전공 제한’ 요구도 폐기해야 한다.

박혜신 한국외국어대 중국어대 학생회장

이화여대

총회는 무산됐지만, 저항의 잠재력은 존재했다

이화여대 학생들은 신입생 등록금을 인상한 학교에 맞서 3월에 학생총회를 성사시키고, 일주일 동안 채플 거부 운동을 했다. 투쟁에 밀려 학교 당국은 장학금 인상, 교육환경 개선 등을 약속했지만, 등록금 인상 철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래서 학생들은 총투표를 통해 학교 답변을 거부(투표 참가자 중 70퍼센트가 반대)했다.

“다함께 이화여대 모임과 동아리 ‘함께 만드는 변화’ 회원들은 중운위(총학생회장단과 단과대 대표자 회의) 성원들이 대체로 투쟁 확대에 소극적인 상황에서 더 많은 학생들의 투쟁 의사를 모으고 학교에 압력을 가하려면 학생총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직접 1천5백83명의 서명을 받아 2차 학생총회를 발의하는 데 성공했다. 중운위는 ‘동력이 없다’며 총회 소집에 반대했지만 나흘 만에 총회 소집 요건인 2백 명의 서명을 훨씬 뛰어 넘는 서명을 모은 것이다.

총회가 발의되자 향후 행동방식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다. 동아리연합회, 다함께 이화여대 모임, 함께 만드는 변화, 한기연 등은 등록금 인상 철회를 얻어내려면 점거 농성에 돌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학생회는 한사코 점거에 반대했다.

동력

그러나 점거 농성은 투쟁의 구심과 관心の 초점을 만들어 학생들의 지지·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고, 학교 행정을 부분적으로 마비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점거 농성은 학생들의 가장 효과적인 투쟁 무기가 될 수 있다. 점거 농성에 동의하는 단체들은 총회 안전 발의를 위해 서명 운동을 벌였고, 사흘 만에 8백40명의 서명을 받았다.

한편, 총학생회는 “등록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면서 “대정부 투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교 당국과의 전투가 치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은 사실상 학내 투쟁을 회피하는 태도였다. 더구나 학내 투쟁 동력이 소진되면 대정부 투쟁도 잘할 수 없다.

아쉽게도 5월 17일 열렸던 2차 학생총회는 정족수 1천6백 명을 채우지 못했다. 하지만 어마어마한 돈을 쌓아 놓고 등록금을 계속 인상하는 학교 당국에 대한 학생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강의실에서 점거 농성의 필요성을 주장하면 박수가 터져 나왔고, 많은 학생들이 지지를 보였다.

하지만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답변이 나온 이후 보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총투표 이후에도 소극적인 방식만을 고집했다. 학생회들이 총회를 거의 홍보하지 않고 조직하지 않은 것도 총회 성사의 큰 걸림돌이었다. 많은 학생들은 총회 개최를 지지했지만 총학생회를 뛰어넘을 만큼의 자신감이 충만하진 못했던 듯하다.

다함께 이화여대 모임, 함께 만드는 변화, 동아리연합회 등은 비록 작지만 앞장서서 투쟁을 확대하는 구실을 자임했고, 학생들의 충분한 지지도 받았다. 이것은 투쟁의 잠재력을 확인하고 투지가 있는 선진적 학생들을 결집하는 성과를 남겼다.

이제 이후 행동 방식은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에서 결정하게 됐다. 우리는 여기서 점거 농성을 지지한 8백40명의 투쟁 의지를 대변할 것이다.

성지현 다함께 이화여대 모임

고려대

투쟁의 동력은 왜 줄어들었는가

5월 12일 열린 고려대 2차 비상학생총회는 3백여 명이 참가해 정족수 미달로 성사되지 않았다. 학교 측의 양보안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투쟁을 계속할지는 5월 26일에 열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2차 비상학생총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숫자가 1차 학생총회에 비해 줄었다는 것은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분노가 줄었다는 것을 나타내지 않는다. 김영익 씨(정치외교학과 2학년)는 “얼마 전 학교 측 답변이 실린 대자보를 읽다가 발을 동동 구르면서까지 화를 내는 여학생을 봤다”고 말했다. 실제로 고려대 학생 10명 중 1명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는 현실은 그대롭다.

그러나 사람들은 분노만 가지고 행동

에 나서지는 않는다. 행동에 나서려면 투쟁을 했을 때 무언가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가능성과 전망이 필요하다.

실제로 올해 3월 말 1천5백 명이 모여 비상학생총회를 성사했을 때는 많은 학생들이 그런 가능성과 희망을 느끼고 있었다.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도 학생들에게 영감을 줬다.

그러나 3월 31일 학생총회 이후에 이렇다 할 대중 투쟁이 진행되지 못하고 점거도 대중적으로 건설되지 못하면서 투쟁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다.

애초부터 점거 농성을 반대했던 일부 학생회장들은 총회가 정족수가 되지 않았다고 근거없이 주장하며 총회의 결정에 흠집을 냈다. 또 학교가 일부 양보안을 내자 협

상을 위해 점거를 접자며 중앙운영위원회에서 점거 중단을 통과시켜 버렸다.

일부 학생회가 등록금 동결을 바라는 학생들의 염원을 제대로 대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학생회에 의지할 것이 아니라 열의 있는 사람들이 실질적인 지도부를 구성해 투쟁을 이끌어야 했다. 그 점에서 좌파가 점거 초기부터 점거위원회 건설을 제안하지 않은 것은 아쉬운 일이었다.

지금 학생들의 정서가 분노는 있지만 지도부를 뛰어넘어 행동을 분출할 만큼 자신감이 높지는 않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등록금 투쟁을 반대한 일부 학생회장들 때문에 지도부가 마비되는 상황은 투쟁에 큰 악영향을 미쳤다.

문과대 학생회와 다함께 고려대 모임

등 일부 활동가들은 1천25명 학생들의 연서명을 받아 2차 총회를 발의하며 투쟁을 더 진전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투쟁을 건설하는 데 확신을 갖지 못하고 중요하던 총학생회와 학생행진 경향 활동가들도 2차 총회를 며칠 앞두고 점거 농성을 중단시키며 투쟁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런 상황이 총회 성사를 어렵게 만든 것이다.

지금은 투쟁 동력이 줄어든 상황이다. 그러나 등록금 인상에 불만을 가진 학생들이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5월 26일로 예정된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교 측의 양보안을 받아들이지 말고 투쟁의 불씨를 살려 나갈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정선영

재앙적 긴축 정책에 저항하는 그리스 노동자들

그리스는 IMF 총재 도미니크 스트로스칸의 체포 이후 유럽에 몰아닥친 경제 폭풍에 휩쓸리고 있다.

뉴욕의 한 호텔 종업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스트로스칸은 경제 위기의 타격을 입은 유럽 국가들의 '구제' 과정에서 중요한 구실을 해 왔다.

그리스 구제금융의 조건인 긴축과 사유화는 그리스 경제를 끝없는 추락의 악순환에 빠뜨렸다.

영국 노동당과 성격이 비슷한 그리스 사회당은 지난해 합의한 구제금융의 조건을 바꾸려 한다.

그러나 유럽 엘리트들은 그 대가로 더 많은 긴축과 사유화를 바란다.

그리스 노동자들은 국가와 파시스트들의 폭력에 직면해서도 긴축에 항의하는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5월 11일 하루 총파업 — 경제 위기 발생 후 열한 번째 하루 총파업 — 은 파장이 컸다.

노동자 투쟁의 힘과 갈수록 커지는 긴축 반대 정서는 긍정적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보여 줬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점도 있다.

5월 11일 경찰이 긴축 반대 시위대를 잔인하게 공격한 덕분에 신나치들은 이주민을 노린 공격을 시도할 기회를 붙잡을 수 있었다.

파시스트들은 긴축이 낳은 고통과 환멸을 이용하려 한다. 그들은 위기의 책임이 이주민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스의 TV는 아테네 중심가에서 나치 강패들이 큰 몽둥이와 날카로운 물건을 들고 이주민들을 공격하는 모습을 보여 줬다.

그들은 한 명을 죽이고 많은 사람을 다치게 했다.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원 이자 주간 〈노동자 연대〉 편집인인 파노



국가와 나치의 폭력에 맞서 5월 11일 총파업에 참가한 그리스 이주노동자들

스 가르가나스는 이번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했다.

“아테네에서 한 사람이 칼에 찔려 죽었습니다. 언론들은 이주민이 그를 죽였다고 보도했습니다.

“나치는 이를 빌미로 강패들을 조직해서 사방에서 이주민들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경찰이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몰아내는 분위기를 이용했습니다.”

사람들은 경찰의 행동이 나치를 고무했다고 생각한다. 파노스는 이렇게 말했다. “나치가 난동을 부릴 때 경찰은 한켠에서 상점 문을 닫고 있었습니

다. 5월 16일 아테네와 다른 도시들에서 나치 폭력에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다.

“이주민과 지지자 들은 시 의회 밖에서 반파시스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겁먹거나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뜻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빈곤과 끔찍한 조건은 이주민들이 아니라 은행가들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파업은 그리스 노동자들의 저항 정신이 살아 있음을 보여 줬다.

“파업 규모는 컸지만 지난해 5월만큼 크진 않았습니

다.”

“정부의 추가 긴축으로 자신의 삶이 더

힘들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공공교통 노동자들은 잠시 교통 운행을 중단했지만 하루 총파업에 참가하지는 않았고 이것이 다른 부문에 영향을 미쳤습니

다. “소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예전 하루 총파업과 달리 대중 교통이 멈춰 일하려 갈 수 없다는 핑계를 댈 수 없었습니

다. “소기업 사장들은 노동자들에게 출근하라는 압력을 강하게 넣습니

다. “이것이 아테네 시위 규모에 영향을 미쳤습니

다. 그래도 수만 명이 시위를 벌였

지만 말입니다.”

갈수록 더 많은 사람이 긴축에 대한 급진적 대안을 찾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현 정책이 지속돼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 중 10퍼센트대로 떨어졌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지지기반은 대단히 협소한 것입니다.

“응답자의 약 60퍼센트가 IMF와 재협상을 벌여야 한다고 답했고, 30퍼센트가 유로존·IMF와 단절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것은 현 정부가 왜 곤경에 빠졌는지 잘 보여 줍니다. 그리스 사회당 지도자들은 긴축을 통해 부채를 갚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대중의 지지를 받지도 못할 뿐더러 효과도 없어 정부 내에서도 분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정부 인사들은 구제금융 조건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현 정부는 궁지에 몰렸습니다.

“위기가 너무 심각해 공산당과 시리자 연합(급진좌파 연합) — 둘다 국회의원이 있다 — 을 포함해 좌파들은 좀더 급진적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압력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사회주의노동자당을 포함하는 반자본주의좌파가 좀더 주목을 받고 좀더 많은 지지자들을 확보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5월 16일에 열린 유럽 재무장관 모임은 포르투갈에 7백80억 달러의 구제금융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유럽 엘리트들은 아직 그리스의 운명을 논의하고 있다.

한 가지는 확실하다. 이들이 무슨 짓을 하든 강력한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매튜 쿡슨

출처: 영국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크〉

번역: 김용욱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에 대한 보복을 중단하라!

얼마 전 인천의 한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베트남 이주노동자 20여 명이 줄줄이 체포돼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들은 대부분 영문도 모른 채 현장에 들이닥친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은 이 노동자들을 ‘불법 파업에 따른 업무방해와 폭력’ 등의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이 노동자들이 지난해 7월 인천신항 컨테이너 부두 공사 현장에서 파업한 것에 대한 보복 탄압이다. 당시 베트남 이주노동자 2백여 명은 극도로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자생적으로 파업을 벌였다.

구속된 한 베트남 이주노동자는 당시 열악한 상황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 일을 하는데, 점심·저녁을 먹으려면 걸어서 내려와야 했고 밥을 먹고 나면 휴식 시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식사 시간 10분 전에 내려갈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요구였어요. 또 매일 반찬을 한 가지만 주고 그것도 매일 똑같은 음식만 줘서 너무 힘들었어요. 이런 것을 바꿔 달라는 게



2010년 이주노동자대회 이주노동자들이 최소한의 노동 기본권을 요구한 게 구속할 이유인가?

우리의 요구였어요.”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은 이 요구를 내걸고 나흘 동안 파업을 했고, 부분적인 양보를 받아냈던 듯하다.

이 노동자들의 파업은 매우 정당했다. 이 소식을 들은 김승섭 씨(경기 건설 노조 활동가)는 “한국인 노동자들도 이런 열악한 조건은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강도가 가장 강한 업종으로 꼽히는 건설 업종에서 노동자들의 휴식 시간은 매우 중요하다. “노동자들 대부분이 점심을 먹고 잠깐이라도 눈을 붙인다. 그렇게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오후 노동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유례없는

건설 현장에서 노조로 조직되지 않은 노동자들도 종종 태업 등으로 사업주를 강제하는 것이 관행이다.

아마 이 이주노동자들 역시 그동안 이런 모습을 봤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노동자들의 집단행동을 이유로 이번처럼 대규모 구속이 일어난 일은 유례가 없다.

회사 측은 이들이 이주노동자라는 점 때문에 가혹한 노동조건을 강요한 것이고 경찰 역시 유례없이 강력한 탄압을 하는 것이다.

이주노동자들은 인종차별도 받고 있다. 경기경찰청의 ‘국제범죄 수사대’가 이 사건을 맡고 있는 것을 보면 경찰이

이 사건을 ‘외국인 조직 범죄’로 엮으려는 불순한 공방이를 갖고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든다.

구속된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연대가 시급히 건설돼야 한다. 이들이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모두 추방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이런 선례는 다른 이주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행동에 나서는 것을 주저하게 만들 것이다. 정부는 바로 이런 ‘선례’를 남기고 싶어 한다.

무엇보다 베트남 이주노동자들의 파업은 이주노동자들 역시 자본가가 강요하는 열악한 조건을 순순히 감내하지만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주노동자들이 저항으로 자신의 조건을 방어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면, 자본가들은 이주노동자를 이용해 내국인 노동자들의 조건을 공격하고 두 집단 간 차별을 통해 서로 적대하게 만드는 일에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이정원